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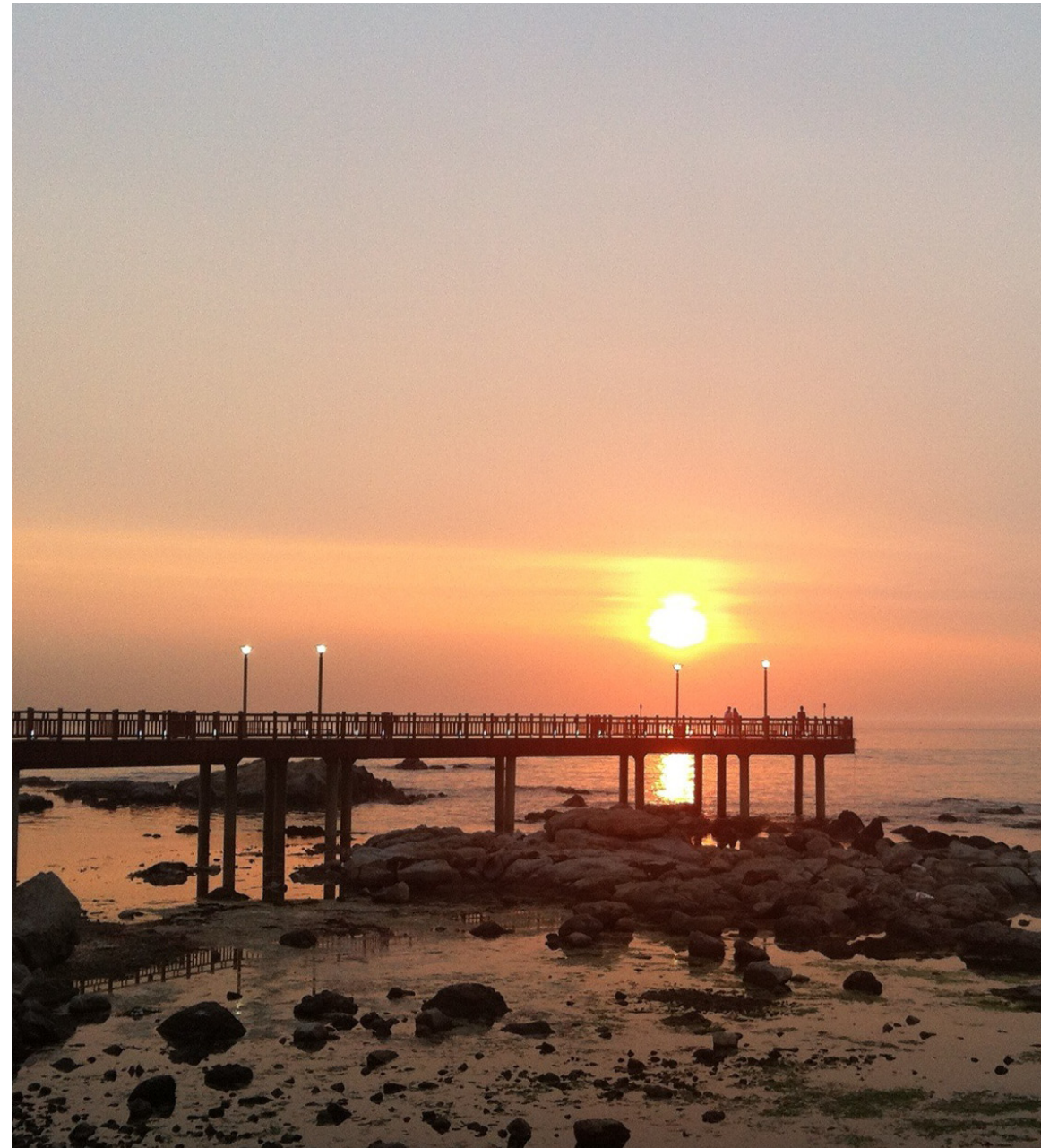
투명하고 공정한 자치입법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매뉴얼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실무 가이드

발행일 | 2013년 12월
발행처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발행자 | 박계옥 부패방지국장
박재용 부패영향분석과장
윤남기 팀장
박상현, 서지만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전화 | (02) 360-6592 FAX : (02) 360-3549
홈페이지 | www.acrc.go.kr
인쇄 및 디자인 | 사회복지법인 해든디자인플러스
(T. 02-868-6854)



2014 호미곶 일출

CONTENTS

투명하고 공정한 자치입법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매뉴얼

I 부패영향평가란 무엇인가?5

1. 부패영향평가제도 개요 6
2. 부패와 부패유발요인 8
3. 부패영향평가 운영 및 관련기관 10
4. 부패영향평가 대상 11
5. 부패영향평가 기준 14

II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부패영향평가는? ... 17

1. 의의 및 필요성 18
2. 평가대상 19
3. 평가 제외 대상 20
4. 부패영향평가 절차 21

III 무엇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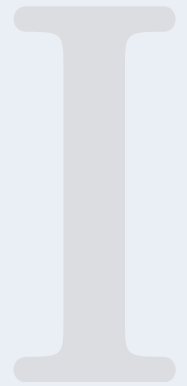
1. 준수의 용이성 24
2. 집행기준의 적정성 39
3. 행정절차의 투명성 56
4. 업무 유형별 체크리스트 74

IV 실제 사례 87

- 지방자치단체 평가사례 89
 1. 준수부담의 적정성 90
 2. 제재규정의 적정성 93
 3. 특혜발생 가능성 97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99
 5.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103
 6.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 106
 7. 접근성과 공개성 110
 8. 예측가능성 113
 9. 이해충돌가능성 116
-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사례 123
 1.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 124
 2.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155

I 부 록 I 173

1. Q & A 174
2. 부패영향평가 관련 규정 180
3. 부패영향평가 서식 193



부패영향평가란 무엇인가?

1. 부패영향평가제도 개요
2. 부패와 부패유발요인
3. 부패영향평가 운영 및 관련기관
4. 부패영향평가 대상
5. 부패영향평가 기준

1 부패영향평가제도 개요

■ 부패영향평가 의의

-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자치법규, 공직유관단체 사규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부패 발생 이전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부패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 부패영향평가 목적

- 첫째, 법령 등의 불필요한 불확정 개념, 규정의 흠결, 비현실적 기준 등 법과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사전에 정비·제거하여 부패발생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 둘째, 법·제도상 부패 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 원인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반부패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합니다.
- 셋째, 법령 등의 입안·집행 과정에서 재량의 구체화, 행정절차의 투명성 향상 등을 통해 국민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합니다.

■ 부패영향평가 필요성 및 추진근거

- 개별 사안별로 사후적 적발과 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통제는 구조적 부패 취약분야의 부패발생 방지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가 필요합니다.
- 이러한 필요에 의해 2005. 12. 29.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해 부패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2006. 4. 1.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2008. 6. 부패영향평가 지침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추진근거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분석·검토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2조
 -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 평가지침, 기초자료의 작성·제출, 개선권고, 평가결과의 통보 등
 -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영향평가 요청
-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제6항
 -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계기관 협의 시 부패영향평가를 함께 요청

2 부패와 부패유발요인

■ 부패의 개념

- ‘부패’란 좁게는 공직자의 범죄나 직무관련 규정·규칙 위반행위를 뜻하지만 넓게는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행위나 비윤리적 행위, 예산 사용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미치는 행위 등을 모두 포괄합니다.

부패 예시	
• 뇌물수수, 향응제공	• 공·사간 이해충돌행위
• 예산의 횡령, 유용, 편취	• 비효율적 공공서비스를 초래하는 행위
• 예산낭비	• 기타 비윤리적 행위 등

■ 규정과 현실간의 관계와 부패유발요인

- 규정(법령, 자치법규 등)과 현실과의 관계는 크게 ①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② 규정이 존재하나 모호한 경우, ③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 첫째, 규정이 있을 경우, 실효성이 없어 훈시규정에 불과하거나 규정끼리 상충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상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규정의 무시 또는 과도한 해석 등으로 위법·부당한 법 집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둘째, 규정이 존재하나 모호한 경우, 규정을 집행하는 공직자가 과도한 재량을 가지고 현실에서 여러 가지 법 집행 양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르게 판단하여 형평성을 위반하거나 더 이익이 되는 행정처분을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권한의 남용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셋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공백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법행위에도 제재를 받지 않거나 절차규정의 부재로 업무성과가 저해되기도 하고 문제가 생겨도 방치하게 되며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에도 근거규정의 부재로 예산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 이러한 규정과 현실의 다양한 관계에서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며,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을 보이는 부분을 규정상 부패유발요인이라고 합니다.

■ 규정과 현실간의 다양한 관계

Rule	Fact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과 부합하고 실효성 있음 • 비현실적이거나 실효성 없음 • 규정끼리 서로 상충
모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석상 논란 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에서 여러가지 집행 양태를 보임 – 적극적 해결 모색 또는 방치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성과 저하, 문제 방치, 예산낭비 등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인지 / 상황 / 외부 환경

3 부패영향평가 운영 및 관련기관

■ 평가 및 운영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법 제28조제1항, 영 제30조)
 -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행정규칙, 현행 자치법규, 공직유관단체 사규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한 공공기관의 이행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부패영향평가를 활성화·지원하는 등 기타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 자문기구 및 외부전문가 풀

-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분야별로 실무 경험이나 학식을 갖춘 전문가들로 자문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평가운영 협조기관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의 제·개정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으로,
 - 소관 법규에 대한 평가·개선 체계를 자발적으로 구축·운영하고,
 - 법령안의 평가요청 및 그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출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 부패영향평가 대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법령의 경우 제·개정 법령안 및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제·개정 법령안의 경우 각 기관이 소관법령안 및 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며,
 - ※ 제·개정 법령의 경우에는 개정되는 부분을 평가하면서 그 밖의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규정도 함께 평가 가능
 - 현행 법령은 위원회가 직접 선정한 평가과제(법령)에 대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합니다.

■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각 기관이 자율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 자체적으로 개선이 곤란하여 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나 현행 행정규칙에 대해 부패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등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직접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령안에 대한 평가시 당해 법령의 시행을 위한 관련 행정규칙까지 포함하여 일괄평가

■ 자치법규(조례, 규칙)

- 자치법규의 경우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기관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제·개정 자치법규안 또는 현행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직접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기관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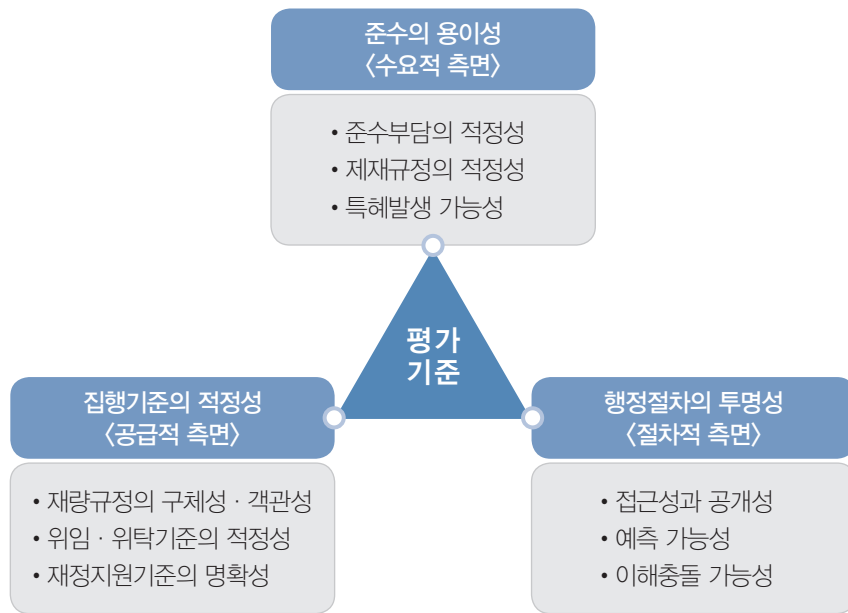
〈부패영향평가 운영 체계〉

구 분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제·개정 법령안 평가	제·개정 법령안	• 법령안 및 기초자료 제출 (위원회 요청시 세부 자료 추가 제출)	• 관계기관 협의단계에서부터 입법에 고 종료일까지 통상 40일 이내 평가 • 필요시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 되는 현행 규정도 함께 평가
	중장기 평가 계획	• 현행법령 등에 대한 평가대상 과제 제출	• 중장기 평가계획 수립 • 중장기 평가과제 선정 및 평가
현행 법령 평가	현안 과제	•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현안문제 우 선적으로 대응

구 분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 규칙 평가	제·개정 행정 규칙	• 자율 평가체계 운영 (원칙) • 위원회가 개선권고한 행정규칙을 제·개정 하거나 자체적 개선 조치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 평가요청 – 법령안 및 기초자 료 제출 (위원회 요청시 세 부자료 추가 제출)	• 평가 매뉴얼 개발·보급·교육 • 평가요청 받은 행정규칙의 평가는 법령안 평가에 준해 통상 40일 이내 에 평가
	현행 행정 규칙	•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행정규칙 선 정·평가 • 필요한 경우 법령안 평가시 관련 행 정규칙까지 함께 평가
자치 법규 평가	제·개정 자치 법규	• 자율 평가체계 운영 (원칙) • 자체적 개선조치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 에 평가요청 – 법령안 및 기초자 료 제출 (위원회 요청시 세 부자료 추가 제출)	• 자체평가 모형 및 매뉴얼 개발·보 급·교육 • 평가요청 받은 자치법규 평가
	현행 자치 법규	•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자치법규 선 정·평가

5 부패영향평가 기준

- 부패영향평가 기준은 규정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찾아내는데 있어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 주며 기준별 검토방법을 통해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이 용이하도록 도와줍니다.



(1) 준수의 용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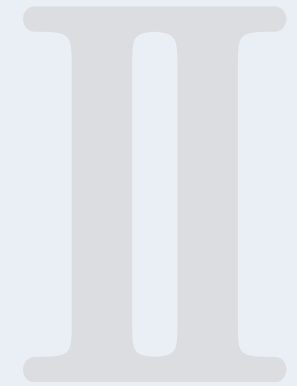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적정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집행기준의 적정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임 · 위탁 기준의 적정성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각종 민간협회 등에 정부업무 위임위탁 시 관련 법적근거 및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위탁목적상 필요시 통제수단 등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공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등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기준 및 범위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예산남용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3) 행정절차의 투명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접근성과 공개성	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부패영향평가는?

1. 의의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3. 평가 제외 대상
4. 부패영향평가 절차

1 / 의의 및 필요성

-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조례·규칙의 규정상 과도한 재량, 규정의 충돌·흠결 등으로 인하여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사전에 개선·정비하여 부패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자치법규는 민원이 많고 일선에서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경우 국민의 청렴도에 대한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 둘째, 인·허가, 보조·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구조적이고 부패에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패를 발견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부패를 발견하더라도 사후적인 처벌로는 부패의 재발을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조적인 부패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합니다.
 - 셋째,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서 공무원의 판단 기준이 될 경우 공직자의 품성과 관계없이 부패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형평성에 어긋난 처분을 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정확하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 평가대상

■ 제·개정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 평가 :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 관계기관(부서)간 이견이 있거나 민감한 사안 등 일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 현행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 평가 : 시행중인 조례 및 규칙
-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상 조례 및 규칙을 선정하여 평가

3 / 평가 제외 대상

- 2012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되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훈령, 예규 등 행정규칙도 평가 범위에 포함

평가 제외 규정 예시

- ◆ 기관의 설치, 행정관리, 행정지원,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기술적인 사항의 조례 및 규칙
예) 소속기관·산하기관 직제, 당직·비상근무, 권한대행, 직무대리, 업무평가, 회의규칙, 청사관리, 증명발급, 보안, 기념일 관련 규정 등
※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평가 담당부서는 직권으로 평가 가능

4 / 부패영향평가 절차

■ 입안주무부서 : 부패영향평가 요청

- 입안주무부서는 제·개정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작성
- 입안주무부서는 입법예고를 시작하는 즉시 공문으로 자치법규(안) (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에 기초자료(별지 1호 서식)를 붙여 평가담당부서에 평가 의뢰

■ 평가담당부서 :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접수

- 접수된 문서는 접수순서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종결될 때까지 추가로 발생하는 자료 및 문서는 하나의 기록물철로 관리
- 평가담당자는 접수된 자치법규(안)과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자료 누락 여부, 자료 작성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자료가 미비한 경우 입안주무부서에 보완 및 추가제출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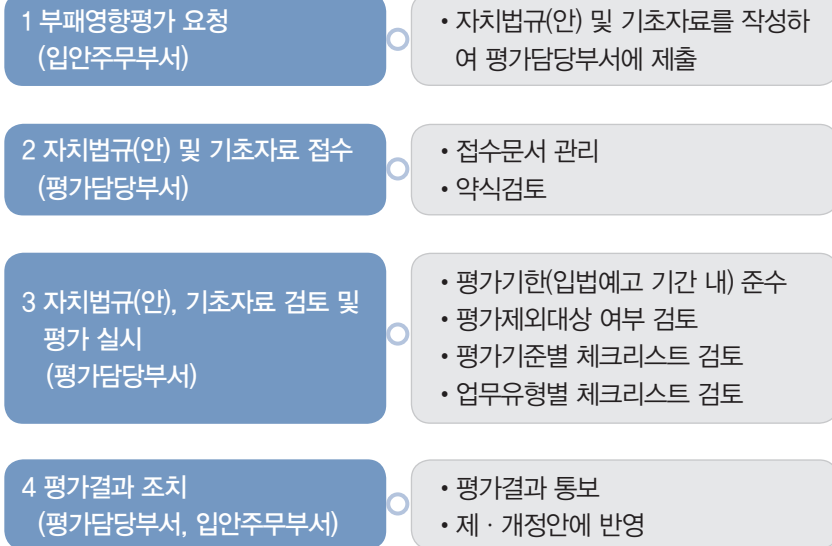
■ 평가담당부서 : 자치법규(안) 평가 실시

- 접수된 자치법규(안)이 평가 제외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면 입안주무부서에 통보하고 평가 종료
- 평가담당자는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와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치법규(안)에 대해 평가를 실시
- 필요한 경우 입안주무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며, 입법예고 기간 내 평가 완료

■ 평가담당부서 · 입안주무부서 : 평가결과 통보 및 반영

- 검토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담당 부서는 세부평가서(별지 2호 서식) 및 결과통보서(별지 3호 서식)를 작성하여 자치법규 입안주무부서에 개선의견을 통보하고 개선의견이 없을 경우 원안동의 통보
- 다만, 개선의견에 대해 부서간 이견이 있는 등 위원회의 자문 및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 협조 및 지원 실시
- 입안주무부서는 평가담당부서의 개선권고 취지 및 개선안을 고려하여 자치법규(안)을 수정 · 반영하고 평가담당부서에 통보

〈평가 업무흐름도〉



무엇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1. 준수의 용이성
2. 집행기준의 적정성
3. 행정절차의 투명성
4. 업무 유형별 체크리스트

1 준수의 용이성

(1) 준수부담의 적정성

● 평가 사례 ●

1. 신청 취소시 수수료 반환 의무화

평가 대상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 검토 내용

- 수수료는 신청이 처리됨을 전제로 하는 것
- 신청이 취소되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합목적성을 상실한 과도한 재정적 부담임
- 지자체가 주민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하는 것으로 부패에 해당

■ 개선 point : 수수료의 부과 원인이 사라진 경우 반환하도록 규정

개선 방안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 평가 사례 ●

2. 미납 주차요금 일괄 추정의 예외사항 규정

평가 대상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 하는 주차요금을 부과·징수한다.

■ 검토 내용

-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기본 1시간의 주차요금을 일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준수부담 부과이자, 주민의 재산을 부당하게 수취하는 것
- 예외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타당

■ 개선 point :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 예외사항 규정

개선 방안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 하는 주차요금을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개 요

- 평가 대상 자치법규가 주민 등에 부여하는 부담(각종 비용 또는 희생 등)이 적절한 수준인가를 판단합니다.
- 준수부담이 과도할 경우 유발되는 부패의 양태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뇌물 공여, 부담이 수반되는 자치법규상 의무의 위반·회피, 신고로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의 미신고 행태 등이 있습니다.

■ 주요 검토사항

- ① 준수부담을 부과하는 규정이 자치법규·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 ② 부담금의 부과 등 직접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등 부담의 다양한 형태를 모두 고려했는지?
- ③ 준수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지?

■ 평가 요령

- ① 준수부담을 부과하는 규정이 자치법규·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 ▶ 자치법규에 준수부담의 근거, 요건, 대상 및 범위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부담을 준수하는 자가 이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 ▶ 준수부담의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지 검토합니다.

예 시

- 상황** 법령에서 500만원 이하의 부담금을 부과, 시장이 징수하도록 위임
- 규정** 조례에서 1000만원 이하의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세부 기준을 정함
- ➡ 상위 법령에서 정한 범위 이상으로 과도한 준수부담 부과 : 상위 법령의 범위(500만원) 이내로 변경

- ② 부담금의 부과 등 직접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등 부담의 다양한 형태를 모두 고려했는지?
 - ▶ 현금지출, 현물 및 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작위·부작위 의무, 사실상의 희생, 기회비용 등 까지 모두 검토합니다.

예 시

인허가 서류 등 자료의 요구, 부담금·사용료의 납부, 건축·사용 등의 제한, 특정시설·특정행위의 금지, 공사시행 기간의 제한, 각종 보고·신고·통보·게시 등

③ 준수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지?

- ▶ 준수부담의 완화, 다른 방법으로서의 대체 등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 ▶ 일부에 국한된 문제 해결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합니다.

예 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등 제출 ➡ 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각종 부담 · 희생 등을 수반하는 자치법규상의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 준수부담의 부과 기준, 요건, 효과 등이 모호하여 다르게 해석될 여지는 없는가?	
▶ 직접적인 부담 및 간접적인 부담을 모두 검토하였는가?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인가?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 준수부담의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부담은 없는가?	

(2) 제재규정의 적정성

◦ 평가 사례 ◦

1. 과태료 부과규정의 구체화

평가 대상

사기 ·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액의 5배 이내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 검토 내용

-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의 부과 여부가 임의 규정이며,
- 과태료 액수도 점용료액의 5배 이내에서 재량에 따라 결정
- 과태료를 회피하거나 액수를 줄이기 위한 로비 등 부패의 가능성 있음

■ 개선 point :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반이므로 과태료를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고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세부 납부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개선 방안

사기 ·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액의 5배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평가 사례 ○

2. 센터 지정기준 미달시 필요적 지정 취소

평가 대상

시장은 지원센터로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가 ~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검토 내용

- 최초 지원센터로 지정 시 인정 기준은 지원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 기준으로서 나중에 그에 미달될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당연
- 취소 여부를 시장의 재량으로 두는 것은 제재 회피를 위한 부패 유발 가능하며,
- 정책목적 달성에 적절한 제재규정이라 볼 수 없음

■ 개선 point : 지정기준에 미달 시 필요적(기속적) 지정 취소

개선 방안

시장은 지원센터로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가 ~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개 요

- 평가 대상 자치법규가 위반자에 부과하는 제재(벌칙, 과태료 등)가 적절한 수준인지를 판단합니다.
- 제재수준이 미약할 경우에는 부패방지에 충분하지 않게 되며, 제재수준이 과도할 경우에는 부패행위를 통한 처벌의 회피 시도를 하게 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해 적절한 제재 수준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 주요 검토사항

- ① 제재처분의 요건(기준)과 효과(수준)가 명확하고 구체적인지?
- ② 법령, 행정규칙, 다른 자치법규 등 유사 사례와의 비교·검토를 거쳤는지?
- ③ 제재의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

■ 평가 요령

- ① 제재처분의 요건(기준)과 효과(수준)가 명확하고 구체적인지?
 - ▶ 제재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제재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은지 검토합니다.
 - ▶ 제재처분의 근거규정의 요건과 효과가 담당자의 임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 다양한 사안에 대해 각각 다른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각각 다른 처분을 할 수도 있는 재량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예시

- 상황** 민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 규정**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 ➡ 보조금 환수를 재량 규정으로 하게 되면 환수를 피하기 위한 로비 가능성 또는 보조금의 미환수로 인한 재정의 누수 발생
- : 보조금 환수를 필수적 기속규정으로 개선

② 법령, 행정규칙, 다른 자치법규 등 유사 사례와의 비교·검토를 거쳤는지?

- ▶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약하거나 강한 경우 그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③ 제재의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

- ▶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또는 과소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합니다.
- ▶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부패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지 검토합니다.

예시

- 상황** 사회복지기관 원장이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 규정** 위반행위의 경중에 관계없이 1차 위반시 시정명령 처분
- ➡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제재 수준의 차이가 없으며 중대한 위반행위에도 지나치게 가벼운 제재처분이 수반되어 부패방지 효과 미흡
- : 중대한 위반의 경우 1차 위반시에도 시설장 교체가 가능하도록 개선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유사자치법규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법령, 행정규칙, 다른 자치법규(타 자치단체 포함)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위반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 제재수준이 부패행위 억제에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해당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3) 특혜발생 가능성

◦ 평가 사례 ◦

1. 공인중개사 선정에 관한 특혜 소지 제거

평가 대상

공공시설의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검토 내용

- 국가의 인증을 받은 공인회계사라면 기본적으로 위탁업무에 대해 검토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 구청장이 특정 공인회계사를 지정해 검토보고서를 작성 의뢰하도록 할 정당한 근거가 없음
- 특정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에 해당

■ 개선 point : 공인회계사를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하는 문구 삭제

개선 방안

공공시설의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평가 사례 ◦

2. 업무 위탁의 대상 업체 · 기관 범위 확대

평가 대상

시장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 검토 내용

-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는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외에도 관련 면허업체가 충분히 위탁 수행할 수 있으므로,
- 위탁 대상을 원 규정과 같이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사업에 진입장벽을 설치하는 특혜에 해당

■ 개선 point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조경공사업 등 면허업체에도 위탁 · 대행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개선 방안

시장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또는 대행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개 요

- 공적 사무로 인해 특정인 또는 단체가 불공정·불투명하게 차별적인 이득을 얻게 되는지 판단합니다.
- 자치법규로 인해 특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획득하거나 유지·확대하는 과정에서 뇌물제공, 불법로비 등 부패행위에 개입하거나 용인할 소지가 있는 등 부패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 주요 검토사항

- ①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이 구체적이며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가 없고 간접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 ② 법령, 행정규칙, 다른 자치법규 등 유사 사례와의 비교·검토를 거쳤는지?
- ③ 특혜의 발생을 통제할 수단이 마련되었는지?

■ 평가 요령

- ①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이 구체적이며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가 없고 간접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 대상, 절차 등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 ▶ 규정상 직접적인 혜택 또는 수익, 제3자에 대한 제재로 인한 상대적 이익 등 반사적 이익의 여부까지 검토합니다.

예 시

입찰자격인정, 조사·검사 면제, 제출서류생략, 계약(조건)우대, 사업권부여, 사용료 감면, 우선배정, 보조금지급, 검사기간단축, 공사계약, 입찰참가자평가, 평가위원선정, 자금지원, 허가·인가·면허 등

- ② 법령, 행정규칙, 다른 자치법규 등 유사 사례와의 비교·검토를 거쳤는지?
 - ▶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특혜·이익의 내용·정도가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합니다.
- ③ 특혜의 발생을 통제할 수단이 마련되었는지?
 - ▶ 수익을 부여하는 규정에 특혜를 방지하는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예 시

수익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사유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뇌물공여·보조금횡령 등 부패행위자 수혜자격 박탈, 수혜자 이력관리를 통한 반복적 특혜 방지, 혜택 부여 규정 유효기간 설정 등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자치법규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유사사례 등과 비교·검토시 혜택이나 이익의 수혜대상이 특정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 내용·정도가 과도한 것은 아닌가?	
▶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2 집행기준의 적정성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평가 사례 ●

1. 과태료 가중·감경의 구체적 범위·기준 구체화

평가 대상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 검토 내용

- 과태료 액수 감감의 상·하한 및 감감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이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 및 액수 결정을 재량행위로 변화시키는 결과
- 처분권자의 자의적 결정 등 부패 유발 가능

■ 개선 point :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는 기준과 상·하한액을 구체적으로 규정

개선 방안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평가 사례 ○

2. 모호하고 추상적인 판단기준의 구체화

평가 대상

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감정평가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 검토 내용

-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증대’라는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 결정의 요건은 지나치게 모호하고 다의적으로 해석 가능
- 결정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요율 감경의 특혜 부여 등 부패 소지

■ 개선 point : 모호하고 다의적 기준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규정

개선 방안

종업원 50명 이상을 도민 중에서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도 내에서 조달하는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감정평가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 개 요

- 재량행위의 판단기준이 충분히 구체적이며 자의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구체적·객관적이지 않은 재량규정은 집행과정에서 재량의 자의적 행사·남용 또는 재량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부재로 인한 담당 공무원의 소극적 행동 등 부패를 유발할 소지가 있습니다.

■ 주요 검토사항

- ① 재량판단의 요건·기준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 ② 재량의 범위는 적정한지?
- ③ 과도한 재량권행사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가 있는지?

■ 평가 요령

- ① 재량판단의 요건·기준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 ▶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규정에 충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지 검토합니다.

예 시

상황 지자체에서 외국인 거주· 정착 지원 대상을 정함

규정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 ‘익숙하지 않은’의 정도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담당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지원을 받기 위한 로비 가능성 등 내재

: 한국어능력시험 급수 등 객관적 기준 제시하도록 개선

② 재량의 범위는 적정한지?

- ▶ 유사 법령·자치법규 등과 비교했을 때 재량의 범위가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합니다.
- ▶ 상위 규정에 근거 없이 새로운 재량권을 생성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합니다.

예 시

상황 법령에서 위반행위시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조례에 위임

규정 ~의 경우 시장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상위법령에서 기속행위인 과태료 부과를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재량행위(임의규정)로 설정,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 : '부과하여야 한다'와 같이 기속규정으로 개선

③ 과도한 재량권행사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가 있는지?

- ▶ 재량권 행사의 구체적 처분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 ▶ 재량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등 보완장치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예 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을 통해 하위규정에서 정함, 정의규정의 추가를 통한 이해 보완,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위한 장치 마련(사전통지, 의견청취, 공청회 등),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정보(회의록 등)에 대한 공개제도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해당 조례·규칙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고려사항 등이 자치법규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자치법규나 기타 유사사례에 비추어 과도하지는 않은가?	
▶ 자치법규에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않은가?	
▶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자치법규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한 재량을 설정하고 있지 않은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2) 위임·위탁규정의 적정성

● 평가 사례 ●

1. 수탁기관 모집 절차 규정 마련

평가 대상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검토 내용

- 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라는 위탁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지 않음
- 비공개모집으로 위탁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에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 결정권자에 대한 로비를 통해 수탁하는 등 부패의 소지

■ 개선 point :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도록 명시적 규정

개선 방안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공개모집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평가 사례 ●

2. 위임·위탁 대상기관 선정 기준·절차 마련

평가 대상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

■ 검토 내용

- 전담기관을 지정하면서 특정 센터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위임·위탁함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들에 대한 기회 박탈 및 자격기준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결과
- 서비스의 질 저하, 독점적 지정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는 등 부패 유발 가능

■ 개선 point : 지정 기준을 갖춘 기관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심사 절차 마련

개선 방안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갖춘 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 개 요

- 행정권한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임·위탁하는 과정에서 부패발생의 소지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 수탁기관의 선정·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 관리·감독을 위한 합리적 수단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제 수단 등과 관련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합니다.

■ 주요 검토사항

- ① 위임·위탁에 관해 자치법규상 근거·요건 등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 ② 대상기관 선정 등 위임·위탁 절차상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 ③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구비하고 있는지?

■ 평가 요령

- ① 위임·위탁에 관해 자치법규상 근거·요건 등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 ▶ 위임·위탁의 대상기관, 요건, 근거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상위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지나치게 완화하지 않았는지 검토합니다.
 - ▶ 위임·위탁의 요건 및 사무 등을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하게 위임·위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지 검토합니다.

예 시

상황 위임·위탁의 대상 사무를 규정

규정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의 경우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나 예시 규정의 경우 대상 사무를 지나치게 모호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위임·위탁으로 시장의 권한 남용 및 위탁사업을 하기 위한 로비 등 우려

: 위탁의 대상 사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개선

- ② 대상기관 선정 등 위임·위탁 절차상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 ▶ 위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관련 규정과 위탁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 ▶ 특정 행정사무의 위탁 절차에서 특정 기관에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지 여부와 재위탁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여 정당한 평가 없이 장기간에 걸친 재위탁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예 시

상황 수탁기관의 재위탁 절차에 대한 규정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위탁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예시

- ▶ 재위탁시 평가·감독에 관한 규정과 재위탁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미흡한 성과에도 계속 재위탁이 이루어지는 예산낭비 가능성이 있고, 재위탁 여부를 시장의 재량에 따름으로써 재위탁을 위한 로비 가능성 존재
- : 재위탁의 제한·위원회의 평가를 통한 재위탁 여부 결정 등 관련 규정 개선 필요

③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구비하고 있는가?

- ▶ 위임·위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와 자료제출, 보고 및 정기점검과 협의·승인 등 관리·감독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예시

- 상황** 수탁기관의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한 규정
- 규정** ~사용료를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 수탁기관의 시설사용료는 주민의 부담, 기관의 초과이윤 등과 관련되어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영역이나, 예시 규정의 경우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통제가 어려움
 - : 사용료의 결정에 있어 위탁기관과 사전 협의 또는 승인이 필요하도록 개선

- ▶ 수임·수탁기관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을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제재수단과 지원금 환수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위임·위탁을 실시하는 자치법규상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 (재위임·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 규정 여부 등)에 있는가?	
▶ 위임·위탁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위임·위탁의 선정기준, 절차, 선정결과 등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	
▶ 계속적·독점적인 위탁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위임·위탁 후 업무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 수임·수탁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임·위탁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수임·수탁 기관의 위법 행위시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위탁의 취소 및 업무정지, 보조금 회수 등)	

(3)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

● 평가 사례 ●

1. 재정지원에 필요한 절차·내용 등 관련규정 정비

평가 대상

도지사는 숙련기술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선정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업활동 지원시 우대할 수 있다.

■ 검토 내용

- 도지사가 모범사업체를 선정하여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지원·우대할 수 있도록 하면서,
- 선정 요건, 절차, 지원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음
- 적정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지원 등 재정낭비, 로비를 통한 자의적 기업 선정 등 부패 가능성

■ 개선 point : 선정 요건, 절차, 지원 내용 등을 수립, 공개하도록 규정

개선 방안

도지사는 숙련기술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선정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업활동 지원시 우대할 수 있다. 도지사는 모범사업체의 자격요건, 선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선정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평가 사례 ●

2.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추후 신청제한 규정 추가

평가 대상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검토 내용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할 경우에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에 그칠 경우,
- 반복적으로 보조 사업을 신청하고 부담 없이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부패 발생 우려
- 재발방지 및 부패예방을 위해 선정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

■ 개선 point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업자의 보조사업자 선정 제한 규정 추가

개선 방안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0년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 개 요

-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원 결정·절차·사후관리 과정에서의 부패 발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재정지원 대상 선정·운영에 있어서의 기준 구체화 등 투명성 확보, 사후적인 관리수단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제수단 등과 관련된 부패유발요인을 평가합니다.

■ 주요 검토사항

- ① 재정지원에 관해 자치법규상 근거·요건 등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 ② 지원 대상 선정 등 재정지원 절차상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 ③ 재정지원의 사후관리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지?

■ 평가 요령

- ① 재정지원에 관해 자치법규상 근거·요건 등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 ▶ 재정지원의 대상기관, 요건, 근거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상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등을 지나치게 완화하지 않았는지 검토합니다.
 - ▶ 재정지원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타 법령·자치법규상 사례와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예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 출연, 출자, 국·공유 재산의 사용·대부,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허가기간 연장 등

② 지원 대상 선정 등 재정지원 절차상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 ▶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결정 주체, 방법, 제출 서류, 신청자의 범위, 신청 절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 ▶ 재정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나 절차 및 선정 결과 등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절차상 투명성이 확보되는지 검토합니다.

예 시

상황 지자체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

규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의 내용의 적정 여부

▶ 심사위원회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이 시장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요건 또한 '내용의 적정 여부' 등 모호하여 시장의 자의적 특혜 부여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한 로비 등 부패 소지

: 사업별 보조금의 구체적인 교부 요건을 설정하고 심사위원회의 설치, 평가 기준의 공개 등 절차적 투명성 강화 필요.

③ 재정지원의 사후관리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지?

- ▶ 재정지원 사업의 관리·점검을 위한 보고의무 등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재정지원의 효과성 판단을 위한 성과 평가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 ▶ 위법·부당한 신청에 대한 지원취소 근거규정 또는 위법한 목적 외 사용 등에 따른 환수 등 사전·사후적 제재규정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예 시

상황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사용한 경우

규정 시장은 ~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사용하는 등 중대위반에 대해서는 당연환수 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부패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사용한 경우 허위 신청에 의해 교부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부정하게 사용된 보조금의 비율만큼 당연히 환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규정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상 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 지원수준은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적절한가?	
▶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 되어 있는가?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 위법한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환수나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	

3 행정절차의 투명성

(1) 접근성과 공개성

○ 평가 사례 ○

1. 행정처분에 앞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 마련

평가 대상

군수는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협의회를 거쳐야 한다.

■ 검토 내용

- 도시구역의 지정·변경 등 주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의 경우,
-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칙에 부합하며,
- 개발업자 등과의 유착 방지 등 부패예방에 기여

■ 개선 point : 처분 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마련

개선 방안

군수는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공고하여 군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를 거쳐야 한다.

○ 평가 사례 ○

2. 보조금 지원 후 평가 결과를 인터넷 공개

평가 대상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 검토 내용

-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에 대한 대외적 공개와 주민의 감시를 통해,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부패행위를 통한 평가 결과의 조작 등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음

■ 개선 point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 결과 공개

개선 방안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의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 개 요

- 당사자(민원인, 지역주민 등)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업무처리과정에 접근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참여제도(장치) 내지는 의견진술 기회가 마련되어 있는지 판단합니다.
- 평가대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가 당사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 접근성과 공개성은 공공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부패를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인 수단으로서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 주요 검토사항

- ① 참여, 의견진술, 정보제공 등 관련규정을 두고 있는지?
- ② 별도의 참여제도 또는 정보공개 제도가 없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 ③ 접근성과 공개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규정이 부패방지를 위해 적절한 수준인지?

■ 평가 요령

- ① 참여, 의견진술, 정보제공 등 관련규정을 두고 있는지?
 - ▶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를 위해 의견진술, 공청회, 청문회, 위원회 등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검토합니다.
 - ▶ 사업 이전·이후에 걸쳐 사업 공고, 사업자 선정, 선정 평가, 사업 성과 등 전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예 시

- 상황** 지방의회(광역) 소위원회에서의 토의·의결 과정이 공개되지 않음
- 규정** 소위원회에서의 토의·의결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국회의 경우 모든 소위원회·특별위원회에서의 의사과정이 전부 실시간 인터넷 중계 이루어짐)
- ➡ 실질적인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지는 지방의회의 소위원회 의사과정 공개를 통해 예산·감사·조례 입법 등 지방의회 주요 사무에서의 주민에 의한 감시와 부패 예방이 가능
- : 지방의회 소위원회 의사과정도 전부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조례 제정

- ② 별도의 참여제도 또는 정보공개 제도가 없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 ▶ 행정의 효율성, 신속한 집행 필요 등 타당한 이유 여부가 있는지, 접근성과 공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예 시

- 행정절차법상의 참여만으로 충분
 - ➡ 행정절차법상의 참여만으로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 검토
- 정보유출 등 참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참여를 최소화할 필요
 - ➡ 정보유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의 사례를 조사하여 그 결과의 파급효과가 심대한지 검토

예시

- 참여보다는 신속한 결정·집행이 필요한 사안인 경우
 - ➡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이 결과적으로 정책의 수용성을 증가시켜 신속하게 정책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검토
- 참여의 확대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저해
 - ➡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지 검토
- 기타 행정의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필요 없는지 합리적인 이유 검토

③ 접근성과 공개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규정이 부패방지를 위해 적절한 수준인지?

- ▶ 주민의 참여 또는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당사자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지 또는 정보 접근이 용이한지 실효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 ▶ 참여기회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예시

- 상황** 지방의회 의사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여부
- 규정** 지방의회(광역) 의사과정을 회의록공개 및 방청허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
- ➡ 회의록 공개는 실제 의사과정과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며 방청허가는 비교적 소수의 주민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한계, 주민·외부전문가에 대한 설문결과 과반수 이상(53.5%)이 기존 공개방식이 미흡하다고 답변
 - : 인터넷을 통해 전 지방의회 의사과정을 실시간 중계하도록 개선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주민 참여제도 또는 정보제공을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실효성 있는 제도인가? -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고, 업무처리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별도의 참여장치 또는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해당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접근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2) 예측가능성

○ 평가 사례 ○

1. 허가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평가 대상

시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 검토 내용

- 허가의 요건을 '일정한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 어떤 기준을 갖춰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모호할 뿐만 아니라 허가 여부에 대한 결과 예측이 불가능
- 민원인으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과도한 자료 준비 등 부담을 부여하고 허가 여부에 따른 자료의 보완 또는 사전 준비 등 예측의 이익을 가지지 못하게 함

■ 개선 point : 허가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개선 방안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 평가 사례 ○

2. 모호한 허가 제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평가 대상

담배자판기는 군 전역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이 주로 이동하는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 검토 내용

- 담배자판기 설치의 제한 요건으로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이 제시되었으나,
- 어느 지역을 뜻하는 것인지 기준이 모호
- 담배자판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업자의 예측과 달리 자의적 결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될 우려

■ 개선 point : 설치의 제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규정

개선 방안

담배자판기는 군 전역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1. 「학교보건법」 상 절대정화구역인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 거리 50미터까지의 지역

■ 개 요

- 지방자치단체 업무처리 과정 및 결과를 누구나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지 판단합니다.
-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업무에 필요한 제출서류, 절차,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상 절차를 따를 경우 어떤 결과가 도출되리라는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하여, 불투명한 결과를 대비하기 위한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합니다.

■ 주요 검토사항

- ① 신청시 기재사항, 요구자료, 신청기준 등 행정절차적 측면에서 관련 규정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 ② 기준·절차 등 관련 규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 ③ 제출된 자료, 자격 기준 등에 의해 처분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

■ 평가 요령

- ① 신청시 기재사항, 요구자료, 신청기준 등 행정절차적 측면에서 관련 규정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 ▶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소요 기간 및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지 검토합니다.

예 시

상황 저소득농업인에 대한 지원 신청 규정

규정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민원인(저소득농민)이 작성해야 하는 관계서류가 무엇인지 불명확하여 민원인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서류를 준비하게 하거나 담당자가 고의로 필요 서류를 누락하여 탈락시킬 수 있는 등 부패 소지 : 관계서류의 목록을 하위 규정 또는 [별표]로 정하도록 함

- ② 기준·절차 등 관련 규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 ▶ 어떤 민원인이라도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절차·결과 등을 예측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③ 제출된 자료, 자격 기준 등에 의해 처분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

- ▶ 모호한 기준, 중의적·다의적 표현 등으로 행정청의 정당한 재량 범위를 넘어 민원인의 결과 예측이 어렵지 않은지 검토합니다.

예 시

상황 향토유적의 지정 기준에 관한 규정

규정 향토유적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적으로 한다.

1.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적

예시

- ▶ 민간의 소유재산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할 경우 처분 등이 제한되므로 소유자로 하여금 지정 여부의 예측이 가능해야 할 것이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라는 기준은 예측의 근거를 제공하기에 지나치게 모호함
- :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개선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해당 자치법규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 평가대상 자치법규에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주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주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3) 이해충돌 가능성

● 평가 사례 ●

1. 위촉직 위원 구성에서 사적 이해관계자 제외

평가 대상

○○도 버스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도 교통국장, ○○○도지방경찰청 교통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한다.

4. 버스업체대표(협회·조합포함)나 운수종사자 대표

■ 검토 내용

- 버스회사 등에 대한 지원 여부, 내용 등을 결정하는 버스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면서,
- 버스업체 대표나 운수종사자 대표 등 직접 이해관계자를 선정
- 위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견을 개진하고 심의를 의결하여 공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음

■ 개선 point : 위촉직 위원에서 직접 이해관계자를 제외

개선 방안

4. 버스업체대표(협회·조합포함)나 운수종사자 대표(이해관계인 삭제)

○ 평가 사례 ○

2. 위촉직 위원회의 연임 제한규정 마련

평가 대상

당연직 위원회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검토 내용

- 위촉직 위원회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된 상황
- 이 경우 통상 도지사·시장 등에 의해 위촉되는 위촉직 위원회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로비나,
- 장기간 재직으로 인한 관련업체와의 유착관계 형성 등 부패의 소지

■ 개선 point : 위원회의 연임 제한 규정 마련

개선 방안

당연직 위원회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개 요

-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 이해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지원금의 선정·평가과정에서 평가위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대해 평가하거나 심사위원회 위원이 사적 이해관계 있는 자에 대해 심사하는 등 사적 이해에 의해 공적 이익이 훼손되는 부패행위를 예방합니다.

〈이해충돌 (Conflict of Interest)〉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주요 검토사항

- ① 평가 대상 업무 관련규정 전반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 ②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구비되어 있는지?
- ③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보다 다양한 방법이 검토되었는지?

■ 평가 요령

- ① 평가 대상 업무 관련규정 전반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 ▶ 지원 대상의 선정, 성과의 평가 등 공무원 및 평가자 등의 재량이 개입될 수 있는 업무영역에서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예 시

- 상황**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심사위원회 위원 임명·구성에 관한 규정
- 규정** 위원은 시의원, 관계공무원,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 지원 대상·규모 등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본인의 거주 아파트 또는 본인의 친인척이 사장 등으로 있는 건설 회사가 분양한 공동주택 등에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원을 하는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
- : 안전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배제하거나 스스로 회피, 또는 심사대상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예 시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장기간 재직하여 이해관계인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구비되어 있는지?

- ▶ 사적 이해관계와 연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제척·기피·회피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결정을 한 경우 위원에서 해촉, 차후 평가자로 위촉 제한 등 책임성 제고를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예 시

- 자격요건 및 임기·연임 규정
 -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 임기 만료 규정이 없거나 계속된 연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착관계를 방지 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검토
- 제척제도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지를 검토
- 기피제도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예 시

- 회피제도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 해촉제도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③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보다 다양한 방법이 검토되었는지?

- ▶ 제척·기피·회피 등 직접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청렴 서약, 회의자료 보관 등 간접적인 수단까지 고려하였는지 검토합니다.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에 대해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청렴서약 또는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4 업무 유형별 체크리스트

(1) 위임·위탁 업무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위임·위탁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해 위임·위탁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거나 상위 법령에서 정한 대상사무의 범위보다 확대하여 무분별하게 위임·위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 위임·위탁 대상사무의 내용, 범위와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재위임·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위임·위탁에 관련한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 위임·위탁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위임·위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 위임·위탁 대상업무, 대상기관, 시행절차 및 운영성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 여부 확인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임·위탁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 수임·수탁자에 제공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가? – 위임·위탁으로 특정 개인, 집단에게 부당한 특혜가 발생할 가능성 검토	
• 위임·위탁의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대상기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한 보고 의무 등 절차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수임·수탁 기관 또는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제재수단이 구비되어 있는가? – 처벌규정(벌칙규정), 지정취소·업무정지·지원금 회수 등 행정처분, 계약해지	
• 수임·수탁자에게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이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2) 지도·단속·점검 업무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지도·단속·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시행요건, 시행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지도·단속·점검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가?	
• 지도·단속·점검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단속·점검의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단·임의방문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실시전 사전통보 – 대상범위, 기간, 연장사유 등에 대한 명시 및 설명의무 확인 – 증표 제시 등 조사자 신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단속·점검의 한계가 규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침해의 원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단속·점검의 실시대상 업체에게 부과된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현실적 수준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법·부당한 지도·단속·점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절한 수준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단속·점검 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누락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게 통보 및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단속·점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시행기간, 시행결과(위반내용),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단속정보 사전유출, 위법행위 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참여 합동단속,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	--

〈참고 : 단속·점검분야 예시〉

풍속영업분야	식품·위생분야	환경분야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무도장 및 무도학원 등	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식품가공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등	대기·악취배출업소, 폐수배출·처리업소, 오수·분뇨처리업소, 폐기물배출·처리업소, 소음·진동배출업소, 유독물영업소 등

(3) 인·허가, 승인·지정 업무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가·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허가 등에 대한 처리권자의 재량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허가 등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은 적정하며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지나치게 짧을 경우 혼시규정화 될 수 있으며, 지나치게 길 경우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접대, 급행료 등 부패 가능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청서류, 준비사항, 처리기준 및 처리절차 등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수준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신청서류, 준비사항, 대기시간 등 민원인의 준수부담은 사회통념이나 유사업무와 비교할 때 적절한 수준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인·허가 처리기준,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법·부당한 인·허가 및 그 거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익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이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후 관리·감독 규정을 두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허가 이후 각종 지시, 시정명령, 보고 등 사후 관리·감독의 요건·기준 및 종류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정제재 종류를 법령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취소, 정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법적근거는 타당한가? – 법령으로 정해야 할 제재를 자치법규로 규정하는 것은 아닌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반행위별 또는 행정제재 유형별로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은 유사업무에 규정된 제재수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가? 	
---	--

(4) 보조·지원 업무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지원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지원의 목적, 대상, 사용한계(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지원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평가 선정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자치단체장에 의한 자의적 선정 가능성 차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지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및 성과평가 등을 공개하는 규정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지원 경비가 행정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도록 적절한 관리·감독·정산·성과평가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지원 경비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처벌규정(벌칙규정), 공무원의제규정,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지원금 회수, 수혜자격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지원 명목으로 보조·지원 대상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부관을 부과할 여지는 없는가? 	

(5) 조사 업무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조사권 행사의 법적 근거, 조사요건, 조사주체, 대상범위 및 한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 조사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무단·임의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실시전 사전통보 – 조사대상범위, 조사기간, 기간연장 시 사유 설명 의무 등의 규정 확인 – 증표 제시 등 조사자의 신분 확인절차	
•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현실적 수준인가?	
• 위법·부당한 조사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조사내용의 비밀 준수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을 차단하기 위하여 조사 결과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절한 수준인가?	

• 조사결과를 보고 및 사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 대한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조사대상·내용·기간 및 결과,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조사정보 사전유출, 대상자 선정 제외, 조사결과 은폐·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 외부참여 합동조사,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6) 부과·징수 업무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부과·징수의 법적 근거,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부과·징수의 대상 및 판단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가중·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	
• 부과·징수 과정상에 인정되는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가?	
• 부과·징수 금액의 산출기준, 산출방식 및 산출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부과·징수 금액의 상한·하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이 가중·감면 기준, 비율, 기간 등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특혜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 – 가중·감면 기준, 비율, 기간 등이 적정한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과·징수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준수사항 등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은 까다롭지 않고 용이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사유, 기간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에 대한 재량으로 인한 특혜발생가능성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과·징수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부과·징수의 대상·기준, 가중·감면의 대상·기준, 산출근거·산출방식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오납 및 환급금 지급·신청과 그에 대한 처리기간·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다징수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 및 산정 기산일 등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7) 인사업무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과정에서 기관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정보 공개와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공개규정이 있는가? – 사전 공개하는 시점은 관련자의 접근성과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인사방침 결정 및 변경시 적정한 기간 동안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가? – 모집대상 직위, 예상결원, 대상인원 현황 등 각종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 구성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위원 구성비율, 임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녹취, 기록,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승진·전보 등에 있어 기관장에게 별도의 인사가점 부여(인정) 재량을 허용하는 등 부당한 규정은 없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임용 조항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임용의 실시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특별임용계획 및 일정, 임용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결과를 사후공개하고 성과를 분석·관리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승진·전보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당사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서기, 청탁, 밀어주기, 금품·향응제공 등에 대한 시정조치 규정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정실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의 통제장치는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심성 인사 및 보복성 인사에 대한 신고 및 구제 절차 확인 – 인사과정에 대한 이익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에 의한 임의적 감경·보복, 징계위원회 회부결정 재량은 없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또는 불회부", "사안이 경미한 경우 불회부" 등 	

(8)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위촉 및 활동 과정에 관련협회, 특정 이해관계자 등의 개입으로 특혜를 유발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위촉과정 및 활동정보를 구체적·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의 위원장 겸임 또는 위원 단독위촉 권한은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 등 예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절한 수준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규범, 청렴서약서제출, 겸직금지,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구성시 내부·외부 위원의 구성비율은 적정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성이 강조되는 사무에서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인지 여부 	

- 외부위원으로 관계기관, 주민대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있으며 분야별 인원수, 비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IV

실제 사례

- 지방자치단체 평가사례
-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사례

지방자치단체 평가사례

1

준수부담의 적정성

■ 규정명칭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2조(급수종별 순위 및 업종변경)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서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은 다음방법에 의한다.

1. 사용량에 대한 금액을 산출하여 금액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2. 주된시설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주된시설에 따른다.

② 급수업종의 변경은 수도사용자등이 제출한 별지 제17호서식의 급수업종변경신고서 또는 관계공무원이 작성한 별지 제18호서식의 급수업종변경 처리조서에 따라 처리한다.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황 및 문제점

-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 요금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여 산정(조례 제24조제1항)
- 건물 내 입점한 편의시설(커피전문점, 24시간 편의점 등)에 대하여 급수업종 적용 시 동일업종은 동일한 요율로 수도요금이 부과되어야 하나
 - 건물의 주된 시설 업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
 - ※ 사용량이 동일하여도 병원에 입점한 편의시설은 급수업종이 공공용으로 적용되고, 일반빌딩에 입점한 편의시설은 급수업종이 일반용으로 적용되어 병원에 입점한 편의시설의 수도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편의시설에 대하여 급수업종 적용 시 동일업종 간 수도요금 산정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

■ 예시

개정안	개선권고
제22조(급수종별 순위 및 업종변경)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서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은 다음방법에 의한다. 1. 사용량에 대한 금액을 산출하여 금액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2. 주된시설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주된시설에 따른다.	제22조(급수종별 순위 및 업종변경)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은 사용량에 대한 금액을 산출하여 금액이 많은 업종의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적용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주된 시설의 업종을 따른다. 2. 편의시설의 경우에는 조례 제23조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주된 시설의 대표자가 직영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개정안과 같음)

■ 규정명칭 :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이용료) ①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2와 같다.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이용료 납부 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 규정이 없음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환불하도록 규정 신설

■ 예시

개정안	개선권고
제9조(이용료) ①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2와 같다. 〈신 설〉	제9조(이용료) ①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2와 같다. ③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취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2 제재규정의 적정성

■ 규정명칭 :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제16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교육감은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내용 중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5조에 따른 보조금 정산 결과 기 교부된 보조금이 정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 현황 및 문제점

-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내용 중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보조금 정산 결과 기 교부된 보조금이 정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해야 함
- 그러나 보조금을 교부조건 대로 집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예산을 집행하여도 정산서 제출 시 대응투자 실적만 있으면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음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보조금 중단 등의 제재조치 근거규정 마련

예시

개정안	개선권고
<p>제16조(보조금의 반환 등)</p> <p>① 교육감은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내용 중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p> <p>② 교육감은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5조에 따른 보조금 정산 결과 기 교부된 보조금이 정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p> <p>③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16조(보조금의 반환 등)</p> <p>① 교육감은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내용 중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p> <p>② 교육감은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5조에 따른 보조금 정산 결과 기 교부된 보조금이 정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p> <p>③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p> <p>④ 교육감은 학교회계 집행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는 보조대상기관에 대하여 보조금의 중단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p>

규정명칭 :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8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원부자재센터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현황 및 문제점

- 시장은 원부자재센터의 업무 등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시장이 센터의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부실경영 및 직원의 비리 발생 시 적극적인 시정명령 등의 제재장치가 미비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을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 부실경영 및 비리 발생시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출연재산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용하는 경우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

예시

개정안	개선권고
제8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원부자재 센터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센터는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광양시장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수지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② 시장은 원부자재센터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 또는 보조한 재산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출연 또는 보조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3 특혜발생 가능성

규정명칭 :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규칙

제4조(사용신청) ① 제3조의 이용대상자중 학생들이 단체수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 또는 청소년 단체의 장이 수련 실시 전년도 11월 말까지 수련원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수련을 희망하는 경우 그 대표자가 수련 개시 20일전까지 수련원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콘도형 숙소 사용 신청은 수련원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현황

-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음(조례 제3조)
 -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학교의 학생
 -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
 -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학생들이 단체수련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청소년 단체의 장이 수련 실시 전년도 11월 말까지 사용허가를 신청
-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수련을 희망하는 경우 그 대표자가 수련 개시 20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

■ 문제점

- 학생 단체와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수련에 따른 사용신청에 대해서만 규정에 명시하여 사용허가권자의 재량으로 단체에게만 사용 특혜를 부여할 우려
- 성수기, 공휴일 등 사용 희망자가 많아 콘도형 숙소가 부족한 경우에도 공무원 등이 수련을 이유로 숙소를 사용하는 등 혜택을 누릴 가능성
 - 예약관련 담당자 등과 수련원 이용을 원하는 자와의 관계에서 청탁 등 관행적인 부패가 유발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개인 이용자에 대한 사용신청 절차 마련
 - 온라인 예약 시스템 등의 도입

▶ 예시

현행규칙	개선권고
제4조(사용신청) ① (생 략) 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수련을 희망 하는 경우 그 대표자가 수련 개시 20일전 까지 수련원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콘도형 숙소 사용 신청은 수련원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신 설)	제4조(사용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수련을 희망 하는 경우 그 대표자가 수련 개시 20일 전까지 수련원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③ 제3조에 따른 이용 대상의 개인 사용 신청은 매월 15일에 신청하는 정기예약과 정기예약 잔여분 및 예약취소 분에 대하여 수시로 신청하는 수시예약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수련원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시스템에서 예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수련원 이용대상 중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4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규정명칭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4조(요금경감) ①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② 요금 경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2-1)

■ 현황

- 서울시 강서구 서남물재생센터 하수 재처리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마곡지구 재처리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 시장은 하 · 폐수처리수의 재처리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요금을 징수 (조례 제26조제1항)

■ 문제점

-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 부과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요금 경감이 결정될 가능성
 - 요금을 경감 받기 위해 불법 로비 등 부패가 발생할 우려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요금경감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예시) 천재지변 지역, 계량기 자가검침을 신청한 경우 등

예시

제정안	개선권고
제34조(요금경감) ①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제34조(요금경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지역 2. 계량기 자가검침을 신청한 경우 3. 요금 자동이체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급수 과정에서 특별히 경감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요금 경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요금 경감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제34조제1항제4호의 경우 제1호~제3호까지의 사항을 무력화시키는 규정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삭제하거나 다음과 같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하수 및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공익상 또는 급수과정에서 특별한 경감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정명칭 :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제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생략)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현황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허가·신고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관련 법령 및 조례로 정한 표시방법 등의 준수여부를 검토하여 허가·신고 처리하고 있음

문제점

-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에 대해 구체적 기준 없이 추상적·주관적 기준으로 인한 부패발생 가능성 및 업무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허가·신고 처리로 공정성·신뢰성 저해 우려
 - 민원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과도한 밝기 및 색깔로 광고물을 제작한 후 설치 허가처리 과정에서 불허될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불이익 발생

- 허가를 받기 위해 불법 로비 등 부패발생 가능성
 - 업무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무리하게 허가할 경우 과도한 빛 공해로 인해 지역주민의 피해 및 민원발생 가능성
 - ※ 환경부에서는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조명 에 의한 빛공해 방지 법」을 2012. 2. 1 제정, 2012. 2. 2. 시행
 - ※ 서울시는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 조명기구의 용 도별 · 지역별 구체적 설치기준과 조명환경 관리지역별 상향광속률, 건물표면 휘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평가결과 : 개선권고

- 빛의 밝기 및 색깔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 거나 별도 규정으로 정하도록 근거 마련

▶ 예시

개정안	개선권고
제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추 가 적인 표시방법) ① (생 략)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 제1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 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생 략) ③ · ④ (생 략)	제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추 가 적인 표시방법)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 1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 하는 광고물 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 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의 시야에 장애 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개정안과 같음) 3. 그 밖에 세부적인 기준은 도 심의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한다. ③ · ④ (개정안과 같음)

5 위임 · 위탁기준의 적정성

■ 규정명칭 : 강원도 대관령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야외 음악당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지방공기업에게 위탁운 영하게 할 수 있다.

■ 평가기준

- 위임 · 위탁기준의 적정성(2-1)

■ 현황 및 문제점

- 야외 음악당 운영 수탁자 선정과정에서의 특징인 특혜 방지대책 미흡
 - 수탁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무원 등이 이해관계에 있 는 특정 법인이나 단체 등을 수탁기업으로 선정하도록 압력을 행사 할 경우 운영능력이 부족한 단체 등이 수탁자로 선정될 수 있음

■ 평가결과 : 개선권고

- 수탁자 선정시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 수탁기관선 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도록 규정

예시

개정안	개선권고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야외음악당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지방공기업에게 위탁운영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야외음악당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지방공기업에게 공개경쟁 을 통해 위탁운영 하게 할 수 있다. ⑤ 대관령 야외음악당의 위탁운영에 관 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 한다.

규정명칭 : 강원도 대관령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 평가기준

- 위임 · 위탁규정의 적정성(2-1)

■ 현황 및 문제점

- 야외음악당의 운영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
- 기존 업체의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투자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간갱신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해도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기간갱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나,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막연한 기준에 의하여 기간갱신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수탁자의 불법 로비 및 위탁자와 수탁자의 유착 가능성이 있음

■ 평가결과 : 개선권고

- 위탁기간 갱신을 1회로 제한
-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
-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

예시

개정안	개선권고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고 한번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강원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

■ 규정명칭 : 부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단, 정당지원단체는 제외한다)

■ 평가항목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2-3)

■ 현황

- 현 조례는 사회단체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보조금 신청 절차, 보조금 지급 심의, 위원회 운영, 사후 관리 등)을 규정

■ 문제점

- 보조금 지원대상의 선정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선정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지원대상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음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보조금 관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예시

개정안	개선권고
제3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단, 정당지원단체는 제외한다) (신 설)	제3조(지원대상) ① 부산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인 또는 단체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법인 또는 단체가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3.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4.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 규정명칭 : 강원도 숙련기술 장려 조례

제6조(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지원) ① 도지사는 숙련기술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사업체는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업활동 지원시 우대할 수 있다.

■ 평가항목

-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2-3)

■ 현황

-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모범사업체 선정·포상 및 모범사업체에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업활동 지원시 우대 근거 마련

■ 문제점

- 모범사업체 선정기준,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각종 지원 수혜를 목적으로 한 담당공무원 로비 등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음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모범사업체 선정·지원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 모범사업체의 자격요건, 선정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하며,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운영, 지원중단을 위한 자격철회 규정 등 마련
 - 또한 위와 같은 세부내용을 수립하여 대외적으로 공고하도록 함

■ 예시

개정안	개선권고
제6조(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지원) ① 도지사는 숙련기술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사업체는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업활동 지원시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지원) ① 도지사는 숙련기술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모범사업체는 강원도기능경기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도지사는 모범사업체의 자격요건, 선정 절차 등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 사업체는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업활동 지원시 우대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제6조제4항(선정의 취소)의 경우 중대한 위법사유로 선정의 취소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개정안처럼 취소를 임의규정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도지사는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7 접근성과 공개성

■ 규정명칭 : 부산광역시 축제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축제의 평가) ①~② (생략)

③ 축제평가단은 축제기간 중 현지방문 및 조사,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시에서 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

- 접근성과 공개성(3-1)

■ 현황 및 문제점

- 축제 개최자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항목이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평가자의 평가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평가의 객관성·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음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축제평가단의 평가항목을 조례에 명시하거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예시

개정안	개선권고
제8조(축제의 평가) ①~②(생략) ③ 축제평가단은 축제 기간 중 현지 방문 및 조사,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시에서 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축제의 평가) ①~②(생략) ③ 축제평가단 또는 축제 관련 전문기관은 축제기간 중 현지방문, 조사 및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시에서 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규정명칭 :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평가항목

- 접근성과 공개성(3-1)

■ 현황 및 문제점

- 현 조례안은 위원회 회의록 작성이나 회의 결과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바, 위원회 운영 및 활동상황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책임운영과 투명성의 악화로 각종 비리 발생 개연성이 있으므로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회의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 있음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회의 개최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예시

개정안	개선권고
<p>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신 설〉</p>	<p>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p>

8 예측가능성

규정명칭 :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울산하늘공원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사용료를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반환할 수 있으며, 남은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 수 대로 계산하여 정산·반환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3-2)

현황

- 시장은 하늘공원의 증설·재배치 또는 개선이 필요하거나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늘공원의 사용허가를 취소(조례 제9조제1항제4호·제5호)
 - 이 경우 사용허가 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조례 제10조)

문제점

- 사용료의 반환 신청 시 지정된 서식에 따라 민원이 신청할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사용료 등을 반환해야 하나

- 반환 결정 후 지정된 기일 없이 막연히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의 예측가능성 저해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반환 결정 후 반환금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명시

▶ 예시

제정안	개선권고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제1항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사용료의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그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

■ 규정명칭 :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사용허가의 신청) ①~② (생 략)

- ③ 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허가의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3-2)

■ 현황

-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1항)
 - 시설사용자는 사용 예정일 20일 전까지 관장에게 사용허가 신청

■ 문제점

- 시설사용자의 허가 신청 기한은 2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사용 허가서 발급기한은 명시하지 않아 시설사용자의 예측가능성 저해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사용허가서 발급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 예시

제정안	개선권고
제4조(사용허가의 신청) ①~② (생 략) ③ 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허가의 가부를 결정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신청) ①~② (생 략) ③ 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허가의 가부를 결정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서를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9 이해충돌가능성

■ 규정명칭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소속 도시농업 소관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3.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 평가항목

- 이해충돌 가능성(3-3)

■ 현황 및 문제점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법 제정('11. 11. 22)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서울시에 적합한 도시농업 육성·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
- 제6조의 도시농업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의 연임 차수 제한 등의 규정이 없어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관계 및 특혜 발생 가능성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특혜소지 차단을 위하여 연임 제한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
-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 시 해촉, 비밀누설 및 정보이용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 예시

제정안	개선권고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소속 도시농업 소관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3.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도시농업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정안	개선권고
<p>〈신 설〉</p> <p>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p>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심의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사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사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p> <p>③ 위원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p> <p>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규정명칭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③ (생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 중 1명
2.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장
3.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장
4.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5.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6. 기술보증기금대전본부 평가센터 본부장
7. 기금취급은행장이 추천한 소속 임원
8.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9.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자

■ 평가항목

- 이해충돌가능성(3-3)

■ 현황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제4항에 의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금융기관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 할 수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에 의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 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자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①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과 결산심의 ②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임

■ 문제점

- 기금운용관련 심의의 공정성·신뢰성·중립성 저해 가능성 내재
 - “충남신용보증재단”은 기금의 출연을 받을 수 있는 수혜기관이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은 기금의 관리·운용 등의 업무수탁 기관이 될 수 있어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의 직접 이해관계자가 되므로,
 - 해당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의 심의 및 성과분석에 대한 심의의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내재
-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이 규정되지 않아 심의의 전문성·신뢰성 미확보
 -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위촉에 대해서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규정하여 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거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위촉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심의의 전문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기금의 수혜기관 및 업무 수탁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토록 한 규정 삭제
- 위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예시

개정안	개선권고
제16조 ① ~ ③ (생 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 중 1명 2.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장 3.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장 4.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5.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6. 기술보증기금대전본부 평가센터 본부장 7. 기금취급은행장이 추천한 소속 임원 8.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9.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자	제16조 ① ~ ③ (생 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장 2.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3. 기술보증기금대전본부 평가센터 본부장 4.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 5. 공인회계사·대학교수 등 회계 전문가 6. 도내 상공회의소 및 경제단체 임직원 7. 금융기관의 여신평가 전문가 8. 경제·금융 관련학과의 교수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사례

1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

I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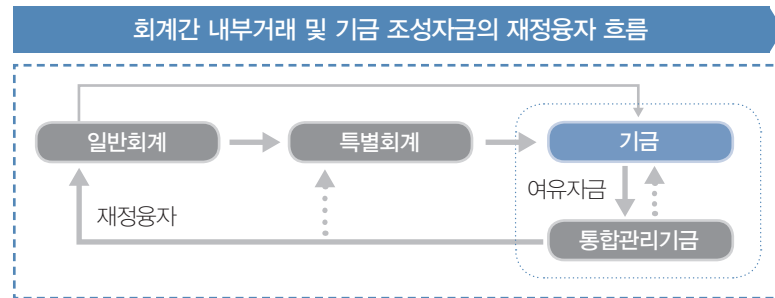
- 최근 자치단체 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등 지방재정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금 조성규모 및 활용 면에서 지방재정 운용에 기금의 중요성 부각
 - 2011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총계규모는 206조 1,155억원으로 전년 214조 3,579억 대비 3.8% 감소하고 있으나,
 - 2011년도 말 기금조성규모는 17조 9,507억원으로 전년 17조 804억 대비 5.1% 증가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 재난예방, 농어촌 발전 등 특수목적사업 추진의 안정된 자금 조성을 위해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
 - 2011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 수는 2,409개로 지속 증가 추세
- 그러나 지방재정 운용과정에서 기금조성 자금을 일반회계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과도하게 융자하는 등 기금 사업기반을 저해하는 편법적 재정운영 및 부패 문제가 제기
 - ※ OO광역시는 매년 분기별로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없이 사업용도를 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기금조성 자금을 일반회계로 융자('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 ※ OO광역시의 과다한 기금조성 자금 차입과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기금을 적립해야 하는 근본적 취지와 달리 운용되고 있어 건전한 재정운용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제기('12.7월 언론보도)
- 따라서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운용, 집행, 심의 등을 중심으로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련 법령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여 지방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

II 일반현황

■ 지방기금 제도 및 회계간 내부거래

- 지방의 재정체제는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성
 - 일반회계는 조세를 주된 재원으로 한 일반세입으로 일반지출을 충당하는 재정운영의 기본회계
 - 특별회계는 목적세, 부담금, 보조금, 사업수입 등 특정 세입으로 특정 사업 지출을 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
 - ※ 예시) 주택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 '12년 지방자치단체 회계별 예산총계 규모는 일반회계 122조 2,957억원(80.9%), 특별회계 28조 7,994억원(19.1%)으로 일반회계의 1/4 규모
- 기금은 출연금, 부담금 등 특정세입과 지출이 연계되는 점에서 특별회계와 유사하나,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는 점에서 차이
 - ※ 예시)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 등
 - 계획의 자율성 : 기금운용 부서는 자율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 ※ 개별 사업부서는 예산총괄부서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최종 예산안은 예산총괄부서가 편성
 - 집행의 탄력성 :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내에서 지방의회의결 없이 계획 변경이 가능하고 기금운용부서에서 바로 지출가능
 - ※ 예산 변경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고, 예산 지출은 지출총괄부서(재무과 등)를 통해 지출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서로 다른 회계이나 내부 거래를 통해 상호자금을 융통

- 개별 기금의 조성재원 중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통합 관리기금은 일반회계 등으로 재정 용자하는 역할 수행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기금의 비교			
구 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기 금
설치사유	• 자치단체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 특정세입으로 특정 세출 담당 • 특정사업운영 • 특정자금 보유운용	• 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원조달 및 운용 형태	• 공권력에 의한 지방세 수입과 무상적 급부의 제공이 원칙	•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융자사업 등 사업수행
수입과 지출의 연계	•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확정절차	• 사업부서 예산요구, 예산부서 예산안편성, 지방의회 심의·의결		• 기금운용부서 계획 수립, 예산부서 협의·조정, 지방의회 심의·의결

구 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기 금
집행절차	• 집행과정에서도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가 가해짐 - 예산의 목적외사용 금지원칙		• 집행과정에서는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
계획변경	• 추경예산 편성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 초과 변경시 지방의회 사전지출 승인
결 산	• 지방의회 심의·승인		

(출처: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 지방기금 조성현황(행정안전부, '11년말 전국 지자체 기준)

- 연도별 조성현황(기초포함) : 기금수는 '05~'06년을 제외하고 지속 증가하여 '11년 2,409개, 조성규모는 '08~'10년 감소 이후 다시 증가하여 '11년 17조 9,507억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기금수	2,223	2,264	2,287	2,150	2,149	2,229	2,293	2,342	2,373	2,409
조성 규모	114,221	132,093	149,152	149,847	179,821	203,250	181,480	178,930	170,804	179,507

- 지역별·설치법령별 조성현황(기초포함)
 - 기금 조성규모는 서울시 7조 5,694억, 경기도 2조 9,780억 순이고 광주시가 1,128억으로 최저
 - 그 중 법정기금 조성규모는 10조 4,218억(58%)으로 경기도 2조 5,351억, 서울시 2조 4,702억 순이고 광주시가 1,026억으로 최저
 - ※ 기금은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법정기금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자체기금으로 분류

구 분	기금수					조성규모				
	소 계	법정기금		자체기금		소 계	법정기금		자체기금	
계	2,409	1,749	-73%	660	-27%	179,507	104,218	-58%	75,289	-42%
서울	332	208	-63%	124	-37%	75,694	24,702	-33%	50,993	-67%
부산	123	93	-76%	30	-24%	7,760	6,633	-85%	1,126	-15%
대구	63	37	-59%	26	-41%	3,348	3,041	-91%	307	-9%
인천	85	68	-80%	17	-20%	7,549	6,179	-82%	1,370	-18%
광주	55	45	-82%	10	-18%	1,128	1,026	-91%	102	-9%
대전	63	36	-57%	27	-43%	3,878	2,336	-60%	1,543	-40%
울산	44	37	-84%	7	-16%	2,546	1,613	-63%	933	-37%
경기	377	284	-75%	93	-25%	29,780	25,351	-85%	4,429	-15%
강원	187	128	-68%	59	-32%	6,835	3,820	-56%	3,015	-44%
충북	143	115	-80%	28	-20%	2,749	2,530	-92%	219	-8%
충남	173	120	-69%	53	-31%	5,010	3,372	-67%	1,639	-33%
전북	176	133	-76%	43	-24%	5,057	4,145	-82%	912	-18%
전남	186	144	-77%	42	-23%	7,191	3,823	-53%	3,368	-47%
경북	201	155	-77%	46	-23%	8,777	6,693	-76%	2,083	-24%
경남	183	130	-71%	53	-29%	9,481	6,293	-66%	3,188	-34%
제주	18	16	-89%	2	-11%	2,724	2,661	-98%	63	-2%

■ 지방기금 운용

- 기금운용계획 수립
 - 기금운용부서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 결재를 받아 집행부(안) 마련
 -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의결 받아 확정
- 기금의 집행
 - 기금집행의 탄력성 :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되고, 의회 의결없이 지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계획변경이 가능

-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외 다른 목적으로는 집행 불가하고, 기금운용부서는 자체 집행 후 증빙서류 보관

• 기금의 결산

- 기금운용부서에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부서에 제출
- 예산부서는 총괄 결산보고서를 장에게 보고 후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 지방의회 의결·승인

■ 지방기금 관련법령 체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별로 개별 기금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관리·운용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예규)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조례	개별기금 설치·운용 조례

Ⅲ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 지방기금 부패영향평가 추진 경과

- '12년 지역토착비리 집중개선 추진과 함께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이 부패영향평가 기준으로 새로이 도입·시행됨에 따라,
 - 지방의 일반회계 예산과 더불어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지방기금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착수 및 부패영향평가 추진



1. 지방기금 실태조사 개요

- 현장 실태조사(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
 - 조사기간 : '12.8.14. ~ 9.7(4주 간)
 - 대상기관 : 경기, 대전, 대구, 경북, 강원, 인천, 부산, 경남, 전북, 광주
 - 조사방식 : 예산·사업부서 기금 담당자 현장면담 및 자료요청
- 서면 실태조사(전국 244개 자치단체)
 - 조사기간 : '12.8.23. ~ 9.12(3주 간)

- 대상기관 : 전국 244개 자치단체
- 조사방식 : 기금관련 규정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2. 지방기금 세부 문제영역 파악

- 실태조사를 통해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세부 문제영역 파악
 - ① 통합관리기금 운영 : 기금재원의 과다한 일반회계 재정융자 등
 - ② 사업관리기금 운영 : 민간보조금의 중복지원 등
 - ③ 기금운용심의회 운영 : 위원회 심의기능 미흡 등

3. 영역별 관련법령의 부패유발요인 교차 분석

- 지방기금 운영을 규율하는 법령체계를 법률부터 행정규칙, 자치법규까지 수직적으로 분석
-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국가재정 관련 법령과 자치단체별 통합관리기금 및 개별기금 조례를 수평적으로 비교분석

지방기금 법령체계	주요 내용	문제영역
법령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 기금 설치근거 규정(제16조) 및 필요사항 조례 위임 	통합관리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규정 및 필요사항 조례 위임 	기금운용 심의회
	대통령령 (동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금운용심의회
	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의 집행 기준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 조례 상 목적사업 외 용도와 집행 금지 	사업관리기금
자치법규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관리기금의 용도(재정용자) 통합관리기금의 재정용자 시 절차, 이자율 등 	통합관리기금
	개별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의 목적(민간보조금 지원) 	사업관리기금
	설치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기금 기금운용심의회 	기금운용 심의회
	보조금 관리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사후관리를 위한 감독, 사후정산 등 집행통제 규정 	사업관리기금

IV 문제점 및 개선 방안(요약)



■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재정용자 관리강화

- 문제점
 - 일부 자치단체는 기금 전체 조성규모 대비 절반 이상을 용자하는 등 과다한 재정용자로 개별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 기반 저해
 - 통합관리기금을 통한 재정용자 시 용자대상의 적정성·상환 가능성 등 타당성 사전 검토 및 심의 절차 미비
- 개선방안
 - 재정용자 규모 적정성 검토 수행 및 심의절차 마련
용자 규모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기금운용계획 심의 시 보고토록 규정 마련(통합관리기금 조례)
 - 재정용자 시 타당성 검토 수행 및 심의절차 마련
재정용자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토록 규정 마련(통합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 기금 보조사업의 재정지원 및 집행·관리 강화

- 문제점
 -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당기금사업을 추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에도 회계구분 없이 일반회계와 동일한 목적의 보조사업에 중복 지원
 - 예산과 달리 기금을 통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통일된 집행·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금보조금의 집행·관리 미흡
- 개선방안
 - 일반회계 보조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검토 의무화
예산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여부를 기금운용부서가 검토하도록 규정(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기금 보조사업의 집행·관리 기준 마련
기금보조사업에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3]민간이전 경비를 준용·집행토록 규정(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보조금 정의 조항에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고 명시(보조금 관리 조례)

■ 기금 보조사업의 재정지원 및 집행·관리 강화

- 문제점
 - 법정 심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하는 등 심의기능 미흡
 - 기금지원 사업결정, 수혜자 선정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 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 우려
- 개선방안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토록 규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기금설치 조례)

🔍 관련 부패사례

■ 통합관리기금 일반회계 재정용자 관련

- ※ 00광역시 「통합관리기금」으로 '04년, '05년에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빌려준 일반회계 사업 용자금을 현재까지 상환받지 못하고 3회에 걸쳐 상환기간을 연장('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 ※ 서울시 000구는 재원확보대책도 없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토지와 건물을 50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193억원을 2%의 낮은 금리로 차입, 기금의 손실을 초래(감사원 '12년 000구 기관운영감사)

■ 기금 보조사업 재정지원 및 집행·관리 관련

- ※ 00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기금 보조사업을 '08년~'11년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번갈아 지원하는 등 회계 구분없이 사업수행(12.8월 권익위 실태조사)
- ※ 00광역시 「체육진흥기금」, 000도 「체육진흥기금」은 매년 사업비 전액을 시·도체육회 사업에 지원하고, 체육회는 대학팀육성지원 등 일반회계와 동일한 사업에 기금 보조금 집행(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 ※ 강원도 00시는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를 제출받았으나, 별도의 정산검사 및 집행잔액 반납조치 미 실시(강원도 '11년 00시 종합감사결과)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 ※ 강원도 00시 7개 기금에 대한 '08~'10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여부 감사 결과 1개 위원회를 제외하고 심의사항인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및 기금 성과분석에 대해 미심의('10년 강원도 기관운영감사)
- ※ 충청남도 00군은 일반회계로 편성하기로 계획된 주차장 부지매입 사업비를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절차 없이 「신청사건립기금」 기금운용계획에 편성, 목적외로 집행(충청남도, '11년 00군 종합감사결과)
- ※ 대전광역시 00구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기금운용관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임명('07년 대전광역시 기관운영감사)

V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재정용자 관리강화

■ 평가대상 조문

•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제00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역 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2.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
3.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자금의 용자
4. 그 밖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

제00조(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주요사항
2. 통합관리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의 통합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장이 부의하는 사항

■ 평가기준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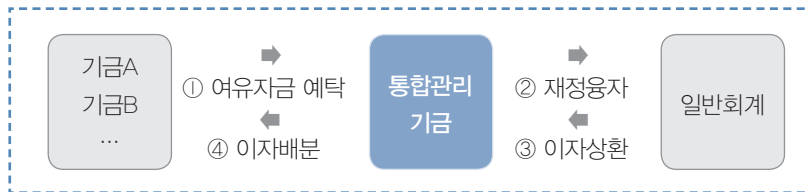
■ 현황

- 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재정용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조례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운영
- '11년 말 기준, 78개 단체에서 통합관리기금 운영 중(광역시 16, 기초 62)
 - ※ 예시) 서울(재정투융자기금), 경기(통합관리기금), 경남(통합관리기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용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재정용자 시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을 주로 일반회계로 용자하여 이자를 상환받고 개별기금에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활용 중



■ 문제점

-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재정용자 규모 과다
 - 일부 광역지자체는 기금 전체 조성규모 대비 절반 이상을 용자하고 있어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 기반 저해 우려
 - ※ <참고2> 인천(75.1%), 대구(66.7%), 부산(59.3%), 광주(54.2%)는 각 지자체별 전체 기금조성규모 대비 일반회계 용자비율이 50%를 초과('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11년 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기금조성 총액(A)	일반회계 용자금액(B)	기금조성 총액 대비 용자비율(B/A)
인천광역시	245,929,037	184,766,669	75.10%
대구광역시	176,974,213	118,000,000	66.70%
부산광역시	773,631,552	458,942,300	59.30%
광주광역시	94,088,562	51,000,000	54.20%

- 재정용자 시 타당성 검토 및 심의 절차 미비
 - 재정용자 시 용자대상의 적정성·상환 가능성 등 재정용자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심의 절차 미비
 - ※ 통합관리기금이 설치된 78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전광역시만 조례 시행규칙에서 용자대상 및 규모의 적정성, 재무구조의 적정성, 상환가능성 등을 사전에 예산부서에서 심사토록 규정('12.8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재정용자 규모의 적정성 검토 수행 및 심의절차 마련
 - 재정용자 규모 적정성 검토 후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보고
- 재정용자 시 타당성 검토 수행 및 심의절차 마련
 - 재정용자 시 타당성 검토 후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보고

▶ 예시1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현 행	개정(안)
제00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통합관리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 4. (생략) <신설>	제00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①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용자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 수립 시 자금의 용자 규모가 제2항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예시2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0조(용자기준) ①통합관리기금운용 관은 「통합관리기금 조례」 제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의 자금을 운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용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용자를 위한 통합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기금 보조사업의 재정지원 및 집행·관리 강화

■ 평가대상 조문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IV.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2) 기금운용계획 수립
- 나. 기금운용계획 수립 흐름
- 기금운용계획 확정절차(지방기금법 제8조)
- ④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반예산과 연계하여 협의·심의
 - 개별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하여 집행부 기금
운용계획(안) 확정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기금을 설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
으로 해당기금사업을 추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일정기간동안 기금을 적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금의 적립기간동안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이 가능함
- 기금운용계획 사전심의시 예산부서는 기금설치 목적사업외 인건비, 업무추
진비, 여비 등은 필요성 여부를 판단, 예산편성 자체

(3) 기금의 관리·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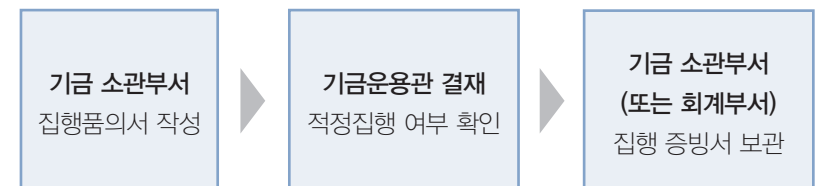
가. 기금관리 및 운용

- 기금의 집행(지방기금법 제6조 제1항)
- 기금은 세입·세출예산과 구분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세계현금
의 지출(집행)의 예에 따라 집행
- 기금집행은 기금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음

예) 1)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 직원연수 등의 명목으로 집행하는 경우

2) 기금운용계획에 일반회계로 집행가능한 일반업무추진비, 여비 등을 편성,
집행하는 경우

- 기금을 집행할 때에는 기금운용 부서에서 집행품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금운
용관의 결재(필요시 기금총괄관리관 협의)를 받아 자체(또는 회계부서에 의뢰)
집행하고 증빙서류는 해당 실과에서 보관



• 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OO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 3. (생략)

■ 평가기준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2-3)

■ 현황

- 기금은 설치목적에 따라 크게 사업관리기금, 융자성기금, 적립성 기금 세 가지로 구분
 - 사업관리기금은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자금을 관리·운용
 - ※ 예시) 사회복지기금, 문예진흥기금, 장학기금 등
 - 융자성기금은 자금을 조성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융자기능 수행
 - ※ 예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 적립성 기금은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자금을 적립
 - ※ 예시) 재해대책·구호기금, 주차시설확충기금, 신청사건립기금 등
- 주로 사업관리기금에서 민간경상보조 등을 통한 보조사업 수행
 - ※ <참고3> 권익위 전국 지자체 실태조사('12.9월) 대상 1,943개 기금 중 민간보조금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지출 내역이 있는 기금 수는 657개(33.8%)

■ 문제점

- 일반회계와 동일 목적의 보조사업에 중복 지원
 - 특정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된 기금재원이 회계간 구분 없이 동

일·유사 보조사업으로 지출

-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는 ‘기금추진 사업의 경우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당기금사업을 추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규정

• 기금 보조사업의 집행·관리 기준 미비

- 기금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과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의 준용이 명시되지 않아 기금보조금 집행·관리 미흡
 - ※ 국가보조사업의 경우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기금 보조사업 역시 예산집행지침의 보조사업을 준용하여 집행토록 규정
 - ※ <참고3> 권익위 전국 지자체 실태조사('12.9월) 대상 1,943개 기금 중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기금 수는 458개(23.6%)

■ 개선방안

- 일반회계 보조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검토 의무화
 - 사업부서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유사·중복되는 일반회계 예산사업 검토를 의무화하고 검토결과를 기금심의회에 제출
 - ※ 전라북도는 '12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중복여부를 각 기금운용부서에서 별도 검토 수행('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 기금 보조사업 집행·관리기준 마련
 - 기금 보조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3」 ‘민간이전경비’를 준용토록 명시

〈지방자치단체 예산 보조금 관련 규정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3〉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관리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성과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 보조사업 일몰제(3년) 적용 - 매년 정기적 성과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자 카드사용 원칙 - 보조사업자 제재(교부중지, 반환명령) - 보조사업자 감독 - 보조사업 사업비정산 등

- 보조금 관리조례의 기금보조금 적용 명시

※ 기금 보조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 및 제도적 장치 미비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보조금관리조례 적용명시 필요('12.8월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전문가 자문결과)

■ 예시1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Ⅳ.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 기금운용계획 수립

나. 기금운용계획 수립 흐름

■ 기금운용계획 확정절차(지방기금법 제8조)

④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반예산과 연계하여 협의·심의
- 개별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하여 집행부 기금운용계획(안) 확정

개정(안) 〈일반회계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절차 규정 마련〉

- 개별 기금운용관은 개별기금 운용심의회 심의 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산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기금을 설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해당기금사업을 추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일정기간동안 기금을 적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적립기간동안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자원이 가능함
- 기금운용계획 사전심의시 예산부서는 기금설치 목적사업외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필요성 여부를 판단, 예산편성 자체

(3)기금의 관리·운용

가. 기금관리 및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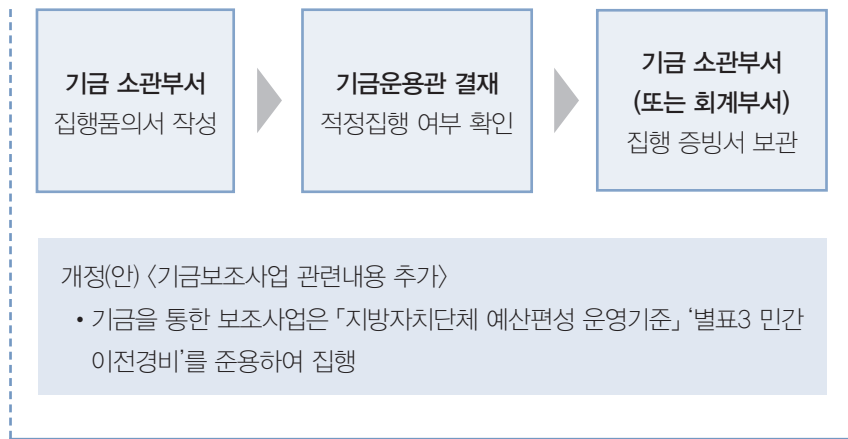
■ 기금의 집행(지방기금법 제6조 제1항)

- 기금은 세입·세출예산과 구분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세계헌금의 지출(집행)의 예에 따라 집행
- 기금집행은 기금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음

예) 1)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 직원연수 등의 명목으로 집행하는 경우

2) 기금운용계획에 일반회계로 집행가능한 일반업무추진비, 여비 등을 편성, 집행하는 경우

- 기금을 집행할 때에는 기금운용 부서에서 집행품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금운용관의 결재(필요시 기금총괄관리관 협의)를 받아 자체(또는 회계부서에 의뢰) 집행하고 증빙서류는 해당 실과에서 보관



예시2 보조금 관리 조례

현 행	개정(안)
제O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OO도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 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O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OO도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 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강화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평가대상 조문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평가기준 : 접근성과 공개성(3-1), 이해충돌가능성(3-3)

현황

- 기금운용심의회의는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 기금성과분석 등 기금운용의 주요 사항을 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은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대통령령에서 규정,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 문제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기능 미흡
 - 법정 의무절차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하는 등 심의기능 미흡
 - ※ <참고4> 권익위 전국 지자체 실태조사('12.9월) 대상 1,943개 기금 중 1회 이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서면심의 포함)를 거친 기금 수는 1,582개 (81.4%), 회의록을 작성한 기금 수는 903개(46.5%)
- 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미흡
 - 기금지원 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 우려
 - ※ <참고5> 권익위 전국 지자체 실태조사 대상 1,943개 기금 중 제척규정을 마련한 기금 수는 98개(5%), 기피규정 마련 기금 수는 33개(1.7%), 회피규정 마련 기금 수는 36개(1.9%)

■ 개선방안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규정 마련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예시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현 행	개정(안)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예시2 개별기금 설치조례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0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VI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개선권고 관련법령	권고기관	조치 기한
1. 통합관리기금 일반회계 재정용자 관리강화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재정용자 규모 적정성 검토 및 심의절차 마련)	지방자치 단체	'13. 10.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재정용자 시 타당성 검토 및 심의절차 마련)	"	'13. 04.
2. 기금 보조사업 재정지원 및 집행·관리강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예산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검토)	행정안전부	'13. 04.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기금보조사업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용)	"	"
	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정의조항에 기금보조금 포함 명시)	지방자치 단체	'13. 10.
3. 기금운용심의회 심의강화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행정안전부	'13. 10.
	개별기금 설치조례 (기금운용심의의 위원회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지방자치 단체	"

※ 조치기한 설정 : 법률·조례 개정 1년 이하, 하위법령 6개월 이하

자료1 16개 광역자치단체(본청)의 일반회계 용자비율 현황

(단위:천원, '11년말 기준, '12.9월 권익위 광역지자체별 실태조사)

구 분	기금 조성총액(A)*	일반회계 용자금액 (B)**	기금조성액 대비 용자비율(B/A)
서울특별시	4,402,915,000	0	0.0%
부산광역시	773,631,552	458,942,300	59.3%
대구광역시	176,974,213	118,000,000	66.7%
인천광역시	245,929,037	184,766,669	75.1%
광주광역시	94,088,562	51,000,000	54.2%
대전광역시	265,340,322	35,861,200	13.5%
울산광역시	169,283,500	3,900,000	2.3%
경기도	817,216,283	380,133,000	46.5%
강원도	328,520,569	24,191,672	7.4%
충청북도	121,930,864	51,069,333	41.9%
충청남도	259,233,606	65,198,400	25.2%
전라북도	274,117,290	25,000,000	9.1%
전라남도	436,630,000	16,227,160	3.7%
경상북도	412,697,645	65,000,000	15.8%
경상남도	458,404,748	0	0.0%
제주도	227,920,502	0	0.0%

* 통합관리기금과의 중복부분을 제외한 개별기금 조성총액 순계규모('11년 결산기준)

** '11년 말 기준 통합관리기금 재정용자현액

자료2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관리조례 준용 현황

(’11년 기준, ’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구 분	조사대상 기금 수	보조금지출 기금 수	%	보조금관리 조례 준용규정 마련	%
계	1,943	657	33.8%	458	23.6%
서울특별시	239	47	19.7%	42	17.6%
부산광역시	105	23	21.9%	18	17.1%
대구광역시	59	20	33.9%	19	32.2%
인천광역시	68	13	19.1%	5	7.4%
광주광역시	44	17	38.6%	13	29.5%
대전광역시	52	11	21.2%	3	5.8%
울산광역시	43	10	23.3%	9	20.9%
경기도	330	149	45.2%	71	21.5%
강원도	127	39	30.7%	35	27.6%
충청북도	138	62	44.9%	39	28.3%
충청남도	131	48	36.6%	47	35.9%
전라북도	124	44	35.5%	42	33.9%
전라남도	138	54	39.1%	40	29.0%
경상북도	164	47	28.7%	29	17.7%
경상남도	164	66	40.2%	41	25.0%
제주도	17	7	41.2%	5	29.4%

자료3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심의회 심의현황

(’11년 기준, ’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지 역	조사대상 기금 수	심의개최 기금 수	%	회의록 작성 기금 수	%
계	1,943	1,582	81.4%	903	46.5%
서울특별시	239	198	82.8%	103	43.1%
부산광역시	105	102	97.1%	66	62.9%
대구광역시	59	46	78.0%	16	27.1%
인천광역시	68	62	91.2%	36	52.9%
광주광역시	44	35	79.5%	21	47.7%
대전광역시	52	46	88.5%	10	19.2%
울산광역시	43	42	97.7%	29	67.4%
경기도	330	289	87.6%	151	45.8%
강원도	127	106	83.5%	49	38.6%
충청북도	138	112	81.2%	69	50.0%
충청남도	131	67	51.1%	38	29.0%
전라북도	124	110	88.7%	70	56.5%
전라남도	138	108	78.3%	85	61.6%
경상북도	164	120	73.2%	75	45.7%
경상남도	164	124	75.6%	73	44.5%
제주도	17	15	88.2%	12	70.6%

자료4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현황

(‘11년 기준, ’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지 역	조사대상 기금 수	이해충돌방지 규정마련 기금 수					
		제척 규정	%	기피 규정	%	회피 규정	%
계	1,943	98	5.0%	33	1.7%	36	1.9%
서울특별시	239	10	4.2%	2	0.8%	4	1.7%
부산광역시	105	5	4.8%	3	2.9%	5	4.8%
대구광역시	59	1	1.7%	0	0.0%	1	1.7%
인천광역시	68	3	4.4%	1	1.5%	2	2.9%
광주광역시	44	0	0.0%	0	0.0%	0	0.0%
대전광역시	52	1	1.9%	0	0.0%	0	0.0%
울산광역시	43	1	2.3%	0	0.0%	0	0.0%
경기도	330	20	6.1%	6	1.8%	5	1.5%
강원도	127	4	3.1%	2	1.6%	2	1.6%
충청북도	138	11	8.0%	3	2.2%	4	2.9%
충청남도	131	1	0.8%	1	0.8%	1	0.8%
전라북도	124	10	8.1%	3	2.4%	3	2.4%
전라남도	138	14	10.1%	10	7.2%	7	5.1%
경상북도	164	7	4.3%	1	0.6%	1	0.6%
경상남도	164	10	6.1%	1	0.6%	1	0.6%
제주도	17	0	0.0%	0	0.0%	0	0.0%

2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I 추진배경

- 지방의회는 그동안 집행부 견제, 주민의사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 제도의 정착·발전을 견인해 왔으며, 주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최근 지방의회별로 ‘회의록’이라는 전통적·소극적 공개방식을 넘어 적극적 의사공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관련 규정 미비로 주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미흡한 실정
 - 일반국민들은 지방의회의 회의과정 공개가 미흡한 것으로 인식
 - 위원회 설문조사(’13.7월) 결과, 상임위를 포함한 지방의회 회의가 인터넷 중계 방식으로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88.7%를 차지
 - 88개 의회가 방청, 회의록 외에 인터넷을 통해 회의상황을 중계하고 있으나, 중계를 위한 세부기준이 없어 중계 수준의 지역별 격차 발생
-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정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이끌어 내고 주민의 의정활동 감시·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련 법령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여 지방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

▶ 의사중계 관련 법령·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로 법령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 지방의회 운영의 공정·투명성 제고를 통해 부패소지 차단

II 지방의회 일반현황

○

■ 지방의회 구성 현황

- 지방의회 · 의원정수 : 244개 의회 3,731명(시 · 도 773, 교육 82, 시 · 군 · 구 2,876)
 - 시 · 도 의회(17) : 855명(지역 691, 비례 82, 교육 82), 평균 50.3명
 - 시 · 군 · 구 의회(227) : 2,876명(지역 2,501, 비례 375), 평균 12.7명
 - 의원정수별 분포

〈17개 광역 의회〉

계	15명	26명	40명 이하	50명 이하	60명 이하	70명 이하	100명 이상
17	1	3	3	4	2	2	2

〈227개 기초의회〉

계	7명	8~10명	11~20명	21~30명	31명 이상
227	52	66	81	23	5

■ 지방의회 상임위 구성 현황(지방자치법 제56조)

- 총 244개 지방의회 중 181개 의회(광역 17, 기초 164)가 627개 상임위 설치(광역의회 모두 설치, 기초의회 중 63개 의회 상임위 미설치)
 - 시 · 도 : 17개 의회 111개 상임위(의회당 4~11개)
 - 시 · 군 · 구 : 164개 의회 516개 상임위(의회당 2~6개)

〈지방의회 상임위 설치현황(2012말, 안전행정부)〉

구분	의회 수	의원 정수	상임위원회 설치 수별 의회 수									
			계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계	244	3,731	181	11	126	21	10	6	5			2
광역	17	855	17			1	4	5	5			2
기초	227	2,876	164	11	126	20	6	1				

■ 지방의회 의사중계 관련 규정 현황

- 「지방자치법」에서 ‘회의공개 원칙’만 규정(제65조)하고, 지방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 지방의회별 「회의규칙」에서는 회의 공개 방식을 회의록 공개, 방청 허가 등으로 규정 · 운영
- 그러나, 지방의회는 의사과정 공개를 위한 의회의 자발적 의사중계 규정 미비로 「지방자치법」의 취지(회의공개 원칙)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음

〈참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관련규정 비교

구분	국 회	지 방 의 회
중계 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법」 제149조의2(중계방송의 허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 녹화 · 촬영 및 중계방송 허용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중계의 근거 규정 – 중계 범위(모든 회의)와 우선중계 대상(대통령 연설, 예산안심사 등) 등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71조(회의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회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 지방의회 「회의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록 공개, 방청 허가, 녹음 · 녹화 허가 등의 근거 규정 – 의회 자체적인 인터넷 중계에 대해서는 그 근거, 대상, 세부 운영기준 등을 규정하지 않음
		(광역의회 중 경상남도 의회만이 의사 중계 근거를 마련하고, 상임위를 포함한 모든 회의를 중계범위로 규정)

■ 인터넷 중계 실시 현황

지방의회 전체적으로 의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인터넷 의사중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중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본회의 위주로, 상임위나 특위 중계는 미흡

- 184개 의회 중 96개 의회(52.2%)가 인터넷 의사중계 미실시
 - 29개 의회(15.8%)만이 본회의, 상임위 등 모든 회의 중계

〈지방의회 인터넷중계 실시 현황〉

구 분		본회의만 중 계	본회의 특별위 중 계	본회의 상임위 중 계	모든회의 중 계	미중계
지방의회 (184)	비율	24.50%	4.90%	2.70%	15.80%	52.20%
	수	45	9	5	29	96

〈광역·기초의회 인터넷 중계 범위 비교〉

구 분	본회의만 중 계	본회의 특별위 중 계	본회의 상임위 중 계	모든회의 중 계	미중계
광역 (17)	2 (11.80%)	4 (23.50%)	1 (5.90%)	7 (41.20%)	3 (17.60%)
기초 (167)	43 (25.70%)	5 (3.00%)	4 (2.40%)	22 (13.20%)	93 (55.70%)

(2012.8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총 244개 의회 중 184개 의회 응답)

III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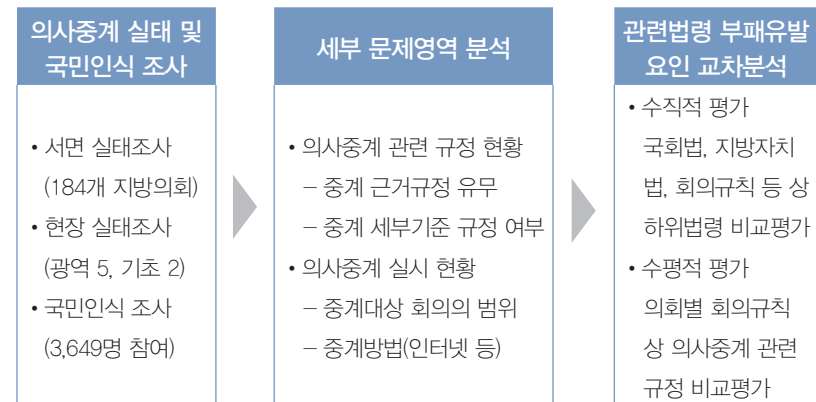
■ 추진경위

-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본질적 요소로, 지방의회 의사결정의 민주성·책임성을 담보하는 장치로 기능
 - 특히, 새 정부 들어 참여와 소통, 정보공개 확대와 공동활용(간막이 제거)이 강조되면서 지방정치에 있어서도 의사활동의 공개·참여 요구 여론이 비등

지방의회 부패와 정쟁(政爭)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의사진행 등 적극 공개와 주민의 직접참여가 필요하며, 공개 및 투명성 원칙을 필수절차로 정착시키도록 법제화 하여야 함(문화일보 2013.1.30, 인용보도)

-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사결정 과정의 주민접근성 향상, 주민감시·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중요성 대두

▶ 지방의회 회의과정 공개(중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



■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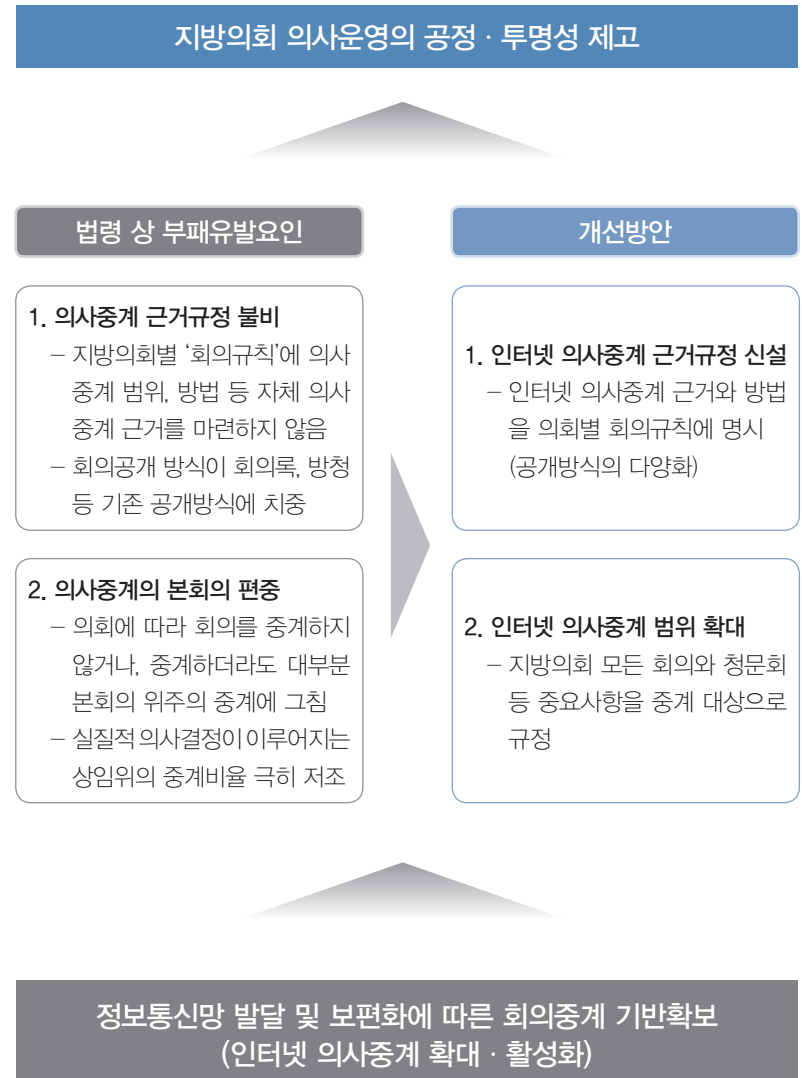
- 현장 실태조사(광역 5개, 기초 2개)
 - 조사기간 : '12.9.6~9.7, 2013.4.3~4.5, 4.9.(6일간)
 - 대상기관 : 서울시, 경기도, 경남도, 전북도, 광주시 의회(광역) 진주시, 거창군 의회(기초)
 - 조사방식 : 지방의회 회의운영 관계자 면담을 통한 회의 중계 현황 파악 및 의견 청취
- 서면 실태조사
 - 조사기간 : '12.8.13~ 8.29.(3주 간)
 - 대상기관 : 전국 244개 지방의회
 - 조사방식 : 지방의회 회의 중계현황 · 의견 전수조사

서면실태조사 결과 요약

- 법령현황 : 자체 의사중계를 위한 규정 미비
- 인터넷 의사중계 현황 : 전체 의회의 52.2%가 인터넷 중계 미실시
- 인터넷 중계 의견 : 지방의회 스스로도 인터넷 의사중계가 필요하다는 의견(65.8%)을 제시

- 지방의회 회의운영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조사기간 : '13.7.1~7.7. (7일간)
 - 조사대상 : 일반국민, 공무원 등 위원회 정책고객
 - 조사방식 : 위원회 정책고객(PCRM)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
- ※ 7개 설문항목에 대하여 총 3,649명이 설문에 참여(참고 2, 설문결과 참조)

IV 문제점 및 개선 방안(요약)



V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규정 마련

■ 평가대상 조문

- ○○의회 회의규칙

〈2013.8월 현재, 평가 대상 조문 미제정〉

■ 평가기준 : 접근성·공개성(3-1)

■ 문제점

- 회의 공개 방식을 회의록 공개, 방청허가 등 전통적 방법 위주로 한정·운영함으로써 의사공개 효과 미흡

〈공개수단별 회의공개 현황〉

공개수단	회의록공개	방청허가	인터넷중계 범위	
			본회의만	모든회의
실시현황	100%	100%	24.50%	15.80%

- 지방의회와 주민 간 효율적 의사소통을 위하여, 모바일·인터넷 등을 활용한 새로운 의사중계 방식 요구

〈위원회 설문조사('13.7월) 결과〉

- 회의록, 방청 등을 통한 공개방식의 효과성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53.5%(1,921명)가 미흡하다고 응답
- 지방의회 회의의 인터넷 중계 필요성에 대하여 85.7%(3,089명)가 필요하다고 응답

- 지방의회 회의규칙은 적극적 의사공개 수단으로서 인터넷 의사중계 관련 사항을 규정하지 않음

〈의사공개 관련 회의규칙 규정 현황〉

공개방법	회의규칙(표준안)	규정내용 및 공개현황
회의록	제53조(회의록 공개)	원칙공개, 비밀유지 등 필요시 비공개
방 청	제83조(방청의 허가)	원칙금지, 방청권 소지 등 예외적 허가
녹음·녹화 등	제88조(녹음·녹화 등)	원칙금지, 의회 등록기자 등 제한적 허용
자체 방송	근거규정 없음	채널확보 등 어려움, 자체방송 없음
인 터 넷	근거규정 없음	일부 지방의회 자발적 중계 실시

- 중계대상 회의의 범위 등 중계 기준이 의회별로 자의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전체적인 공개수준의 의회별 격차 심화
(모든 회의 중계 의회 15.8%, 모든 회의 미중계 의회 52.2%)
- 기존 공개방식 외에 추가로 인터넷 중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의 오해와 불신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 필요(부패유발요인의 사전차단 기능 강화)

■ 개선방안

-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 각 지방의회별 「회의규칙」에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 규정 신설, 기존 회의록·방청 위주에서 탈피 인터넷을 통한 의사공개 방안 마련
- 광역의회는 위원회 개선권고 후 6개월 이내에 회의규칙 반영·시행
(기 시행중인 경상남도 의회는 제외, 16개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근거 규정 신설 및 정비 권고)
- 기초의회의 경우 의원 수, 상임위 설치 현황, 재정자립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시행대상과 시행시기 별도 검토

〈광역·기초의회 제반여건 비교('12년말 기준)〉

구분	의원정수 (평균)	의원 수 10인 이하 의회 수	상임위 미설치 의회 수	재정자립도 (평균)	의원1인당 경비(만원)	의원1인당 인구수(평균)
광역	52명	—	—	시 : 69.1% 도 : 34.8%	개인 : 5,346 운영 : 6,100	59,568명
기초	12.7명	109개 (48%)	63개 (27.8%)	시 : 37.1% 군 : 16.4% 자치구 : 36%	개인 : 3,479 운영 : 4,800	17,467명

(자료 : 행정안전부 「후반기 지방의회 현황」,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규정예시】○○의회 회의규칙

현행	개정(안)
〈신설〉	제○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 방송하여야 한다.

■ 인터넷 의사중계의 범위 확대

■ 평가대상 조문

- ○○의회 회의규칙

〈2013.8월 현재, 평가 대상 조문 미제정〉

■ 평가기준 : 접근성·공개성(3-1)

■ 문제점

-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전에 각 소관 상임위 또는 특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실질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 그러나, 인터넷 의사중계가 본회의 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상임위, 특위 회의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가 제한
(상임위 중계 의회 18.5%, 특위 중계 의회 20.7%)

※ 위원회 설문조사('13.7월) 결과, 지방의회 회의의 공개정도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67.1%(2,433명)가 '보통이하'로 응답

- 따라서, 지방의회가 '폐쇄적 회의운영'이라는 비판을 극복하고 의사운영의 공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임위·특위에 대한 의사중계 확대 필요

〈상임위·특위 비공개 관련 부정적 보도사례〉

- 소관 상임위 업무와 관련하여 "○○시 의원 11명이 공사 참여 업체로부터 3백만~1천만원을 수수"(연합뉴스, '13.4.15.)
- A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씨, 택시요금을 심의·의결하는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택시조합으로부터 1천만원을 금품을 받고 택시요금 인상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B시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씨, 시내 야간 경관조명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법률신문, 2013.4.16.)

■ 개선방안

- 인터넷 의사중계 범위 확대
 - 현재 본회의 위주로 운영되는 의사중계 범위를 상임위, 특위까지 전면 확대 시행
 -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 외에 공청회, 청문회, 행정사무 조사·감사 등 중요 사안을 의사중계 대상에 포함하도록 회의규칙에 명시

【규정예시】○○의회 회의규칙

현 행	개정(안)
〈신 설〉	<p>제○조(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p> <p>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청문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p> <p>③ 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연설, 예산안에 대한 자치단체의 시정연설, 공청회, 청문회, 중요안건의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p> <p>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VI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16개 광역 자치단체 의회(경상남도 의회 제외)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개선권고 관련법령	권고기관 (협조기관)	조치기한
지방의회 의사중계 확대·활성화	<p>지방의회별 회의규칙</p> <p>①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규정 신설</p> <p>② 인터넷 의사중계 범위 확대 등 세부기준 마련</p>	16개 광역의회 (안전행정부)	'14. 02.

※ 개선권고에 대한 광역의회 이행 여부를 '14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자료1 지방의회 의사중계 현황 실태조사 결과

- 184개 지방의회 가운데 96개 의회(52.2%)가 회의 상황을 전혀 중계하고 있지 않으며, 29개 의회(15.8%)만이 본회의, 상임위를 포함한 모든 회의를 중계
 - 상임위 회의를 중계하는 의회는 34개로 전체의 18.5%에 불과

〈지방의회 인터넷중계 현황〉

구분		본회의만 중 계	본회의, 특별위 중 계	본회의, 상임위 중 계	모든회의 중 계	미중계	계
지방 의회 (184)	비율	24.5%	4.9%	2.7%	15.8%	52.2%	100%
	수	45	9	5	29	96	184

■ 광역 지방의회(17개)

- 전체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3개 의회(17.6%)가 회의 상황을 전혀 중계하고 있지 않으며, 7개 의회(41.2%)만이 본회의, 상임위를 포함한 모든 회의를 중계
 - 상임위 회의를 중계하는 의회는 8개로 전체의 47.1%

〈광역의회 인터넷중계 현황〉

구분		본회의만 중 계	본회의, 특별위 중 계	본회의, 상임위 중 계	모든회의 중 계	미중계	계
광역 의회 (17)	비율	11.8%	23.5%	5.9%	41.2%	17.6%	100%
	수	2	4	1	7	3	17

■ 기초 지방의회(167개)

- 167개 기초의회 중 93(55.7%)개 의회가 회의상황을 전혀 중계하고 있지 않으며, 상임위, 22개 의회(13.2%)만이 본회의, 상임위를 포함한 모든 회의를 중계
 - 상임위 회의를 중계하는 의회는 26개로 전체의 15.6%에 불과

〈광역의회 인터넷중계 현황〉

구분		본회의만 중 계	본회의, 특별위 중 계	본회의, 상임위 중 계	모든회의 중 계	미중계	계
지방 의회 (167)	비율	25.7%	3.0%	2.4%	13.2%	55.7%	100%
	수	43	5	4	22	93	167

※ 기초의회의 경우 인터넷(영상)중계 보다는 주로 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회의록 공개, 방청 허가 등의 방법에 의존하여 의사 과정을 공개

〈'12. 8 ~ 9. 권익위 실태조사결과〉

자료2 지방의회 회의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개요

- ▶ 설문내용 : 지방의회 회의공개 필요성, 현재 공개 정도, 효율적 공개수단 등
- ▶ 설문기간 : '13.7.1. ~ 7.7.(7일간)
- ▶ 설문대상 : 일반국민, 공무원 등 위원회 정책고객
- ▶ 설문방식 : 위원회 정책고객(PCRM) 대상 이메일 설문
 - ※ 발송된 이메일 개봉자 4,088명 가운데 3,694명이 설문에 참여(참여율 89.3%)

• 항목별 설문결과

Ⅰ 지방의회 의사공개 필요성 및 현황 인식 Ⅰ

(1) 지방의회 회의(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공개 필요성

응답의견	반드시 필요	어느정도 필요	보통	별로 필요없음	전혀 필요없음	합계
응답자수	2,151명	1,069명	168명	140명	103명	3,631명
비율	59.24%	29.44%	4.63%	3.86%	2.84%	100%

※ 전체 응답자의 88.7%가 지방의회 회의 공개 필요성을 인정

(2) 지방의회 회의 공개현황(정도)

응답의견	충분히 공개	어느정도 공개	보통	별로 공개안됨	전혀 공개안됨	합계
응답자수	321명	874명	893명	1,080명	460명	3,628명
비율	8.85%	24.09%	24.61%	29.77%	12.68%	100%

※ 전체 응답자의 67.1%가 지방의회 회의 공개정도를 보통 이하로 인식

Ⅰ 효율적 의사공개 방식에 대한 인식 Ⅰ

(3) 현재 지방의회 주된 공개방식인 회의록, 방청 경험

응답의견	회의록 경험	방청경험	모두 경험있음	모두 경험없음	제도자체 모름	합계
응답자수	399명	675명	545명	1,449명	555명	3,623명
비율	11.01%	18.63%	15.04%	39.99%	15.32%	100%

※ 전체 응답자의 55.3%가 지방의회 회의 공개방식을 이용한 경험이 없거나 제도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4) 회의록, 방청을 통한 공개방식의 효과성(정보전달 정도)

응답의견	충분히 전달	어느정도 전달	보통	별로 전달안됨	거의 전달안됨	합계
응답자수	193명	816명	662명	1,165명	756명	3,592명
비율	5.37%	22.72%	18.43%	32.43%	21.05%	100%

※ 전체 응답자의 53.5%가 회의록, 방청을 통한 공개방식의 공개효과가 미흡하다고 응답

(5) 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회의과정 중계(생/녹화) 필요성

응답의견	반드시 필요	어느정도 필요	보통	별로 필요없음	전혀 필요없음	합계
응답자수	1,784명	1,305명	277명	178명	60명	3,604명
비율	49.50%	36.21%	7.69%	4.94%	1.66%	100%

※ 전체 응답자의 85.7%가 회의과정의 인터넷 중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부정적 의견은 6.6%에 불과

(6) 향후 인터넷 중계가 필요한 지방의회 회의의 범위

응답의견	모든회의	본회의만	상임 위원회만	본회의와 상임위	중계 필요없음	합계
응답자수	1,928명	630명	91명	844명	126명	3,619명
비율	53.27%	17.41%	2.51%	23.32%	3.48%	100%

※ 지방의회 모든 회의가 중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총 응답자의 53.27%, 상임위원회 회의를 중계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79.1%를 차지한 반면, 중계대상 회의를 본회의로 한정하는 의견은 17.41%에 불과

(7) 의사중계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응답의견	매 우 크게기여	크게기여	보 통	별 로 기여못함	전 혀 기여못함	합 계
응답자수	1,184명	1,574명	584명	218명	65명	3,625명
비 율	32.66%	43.42%	16.11%	6.01%	1.79%	100%

※ 의사중계 실시가 지방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6.1%를 기록

부 록

1. Q & A
2. 부패영향평가 관련규정
3. 부패영향평가 서식

1 Q & A

Q1. 부패영향평가는 청렴도 향상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A1. 부패영향평가는 구조적인 부패가 발생하는 영역 또는 부패가 빈발하는 업무 영역에서, 관련 규정을 분석하여 부패의 원인을 찾아 제거함으로써 부패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여 지역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규정상 부패를 유발하는 원인

- 규정이 있음에도 서로 상충하거나 비현실적인 경우
- 규정이 모호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고 다양한 집행 양태를 보이는 경우
- 규정이 없어서 현실에 대한 규율이 불가능한 경우

Q2. 예산낭비도 부패가 되나요?

A2. 부패의 개념은 과거 공무원의 범죄행위 및 직무관련 규정·규칙 위반행위 등으로 좁게 해석하였지만, 최근 공무원 윤리규정 위반, 권한 남용, 부당한 사익추구, 위법·부당한 예산낭비 등 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패의 정의

- 가. 일반적 정의 :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물질적 또는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돕는 일체의 일탈 행위
- 나. 부패의 범위에 따른 정의
- 최협의 : 공직자의 범죄행위

- 협의 : 공직자의 직무관련 위반행위 (징계사유 포함)
- 광의 :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 (사적 비위 및 비윤리적 행위 포함)
- 최광의 :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 (공공·민간부문 포함)

다. 법적 정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②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③ 부패행위 및 부패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Q3. 기초자치단체에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기초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사무(민간단체 지원, 근린시설 관리 등)를 규율하는 자치법규에 재정운용, 권한의 위탁·대행 등과 관련하여 부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위 법령·자치법규에서 위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한 것을 여전히 모호하게 방치하거나 부패방지수단을 조례에 마련하도록 하였음에도 실행하지 않는 경우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규정을 실제로 집행하고 주민과 만나는 영역이 광범위하므로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이 보다 직접적으로 부패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 반드시 <예시>를 따라야 할까요?

A4. 부패영향평가는 구조적인 부패가 발생하는 영역 또는 부패가 빈발하는 업무 영역에서, 관련 규정을 분석하여 부패의 원인을 찾아 제거함으로써 부패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여 지역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Q5. 부패영향평가에 대해 어려움을 느낄 때 어떻게 도움을 얻을 수 있나요?

A5. 부패영향평가 매뉴얼, 지침, 사례집 등과 부패영향평가 사이버 교육을 통해 이론을 이해한 후에도 실제 평가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적절한 문제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분석과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개선안에 대해 자치단체 부서간 갈등이 있는 등 스스로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권익위에 서 대신 평가를 해주길 요청할 수 있으며, ▶권익위의 권고안이나 지침 등을 적용하는데 있어 모호한 부분 등이 있을 경우 공문서를 통해 질의할 수 있고, ▶간단한 권고안 또는 평가 기준 적용상 의문점 등은 권익위 평가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Q6. 정부는 조직, 복무, 의전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제외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나요? (모든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여부)

A6.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기능 및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 국토의 안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헌법기관이 행하는 직무에 관한 사항, 기타 부패유발요인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한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준용하여, 원칙적으로 전체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2012 부패영향평가 지침)

다만, 외형적으로 평가 제외 자치법규에 해당하더라도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정부 부패영향평가 제외법령		
제외사유	제외 분야 예시	제외법령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기능 및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수당, 문서· 관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공무원 보수규정 • 공무원 교육훈련법 ...
헌법기관이 행하는 직무에 관한 사항	국회법, 법원조직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집행법 • 집행관법 • 민사소송법 ...
국가의 안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국가보안, 예비군·민방위, 국호·각기·연호, 상훈·의전·국경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용전기통신법 • 국경일에 관한 법률 • 민방위기본법 ...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사항	규제일몰규정, 양벌규정 일괄정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일몰조항 삽입에 따른 법령 일괄개정 ...
그밖에 고도의 정책추진 사항이거나 이미 국회와 협의를 거쳐 합의된 경우, 기타 부패유발요인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법률 등	외국과의 조약에 관한 법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

Q7. '이해충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7.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직무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면 이해충돌 상황이 됩니다.

그러한 사례로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 본인 또는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위원회 심의 안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거나, 시설장이 장기간 연임하여 입주 업체와 유착관계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Q8. 재량을 줄이는 것은 적절한 민원사무처리를 어렵게 하지 않나요?

A8. 주민의 민원에 대한 대응성(responsiveness)을 높여 주민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재량을 부여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무제한적인 재량은 권한의 남용과 제재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행위 기준의 부재로 인해 오히려 담당 공무원이 감사 등을 두려워하여 소극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는 행정 재량에 대해 최소한의 행위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며 재량의 한계를 설정하고 권한 남용 등 부작용에 대한 제재 방안을 제시하여 공무원이 안심하고 재량권을 활용하여 적절한 민원사무처리를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2 부패영향평가 관련 규정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부패유발의 가능성

-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 나.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 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 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 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법 제2조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 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법령등이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

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과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3)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라 함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1. 원안동의 :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
2.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
3.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제3조(평가대상)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안(이하 “제·개정 법령안”이라 한다)
2.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훈령·예규·고시·공고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포함한다)와 조례·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를 요청한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이하 “제·개정 자치법규안”이라 한다)

4.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평가를 요청한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정관 등(제정이나 개정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부규정(이하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이라 한다)

제4조(평가기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에 따른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제2장 부패영향평가 처리 절차

제1절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5조(법령안 및 기초자료의 접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개정 법령안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소관기관”이라 한다)의 평가 의뢰 문서를 접수한다. 다만, 제정 또는 전부 개정 법령안을 의뢰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이하 “세부자료”라 한다)까지 첨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부처전담제 실시) ① 평가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담당자별로 각 소관기관을 전담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 의뢰 문서를 접수한 문서수신 담당자는 업무 분장에 따라 지정된 평가담당자에게 이를 전달한다.

③ 평가 의뢰 문서를 전달받은 평가담당자는 이를 인수하고 과장까지 선람하게 한다.

제7조(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 ① 평가담당자는 평가 의뢰서가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세부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

는 경우에는 즉시 소관기관에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제·개정 법령안 및 기초자료·세부자료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기초평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세부평가서(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한다.

③ 평가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분석 시 평가 대상 법령의 상위 근거 법령, 평가 대상 법령을 근거로 하는 행정규칙·조례 등 하위 법령 및 관련·유사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다.

제8조(평가 기한) 평가담당자는 제·개정 법령안의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를 마친 후 즉시 소관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소관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종료일부터 4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자문 의뢰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① 평가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1. 전문적·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기관과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3. 소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평가가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평가담당자는 개선권고를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개선권고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평가담당자는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중요 사항”이라 한다)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기관과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3. 다수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사항

제10조(평가결과 보고 및 통보) ① 평가담당자는 제·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단순하거나 반복적인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반사항에 대한 결재 : 부패방지국장
2.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재 : 담당과장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려는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이 중요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법무보좌관(「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2항에 따라 부패방지 업무를 분장하는 법무보좌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를 받는다.
- ③ 평가담당자는 제·개정 법령안 전체에 대하여 원안동의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결재를 거친다.
- ④ 평가담당자는 평가결과에 대한 결재를 완료하는 즉시 소관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 ⑤ 평가담당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첨부(다만, 원안동의인 경우를 제외한다)한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로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 ⑥ 평가결과가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인 경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⑦ 평가결과가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인 경우로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평가 절차) ① 소관기관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3. 소관기관과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재평가 요청된 제·개정법령안은 당해 법령안의 원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과별 합동토론 등의 절차를 거친다.
- ③ 재평가 결과 위원회의 의견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 ④ 재평가 결과 위원회의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한 경우에는 법무보좌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친다.

제2절 현행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12조(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의 수립·시행) ①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이하 “현행 법령등”이라 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현행 법령등에 대한 평가대상과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제출한 평가대상과제를 접수하여 관리한다.

④ 위원회는 각 기관이 제출한 평가대상과제를 토대로 소관기관과 협의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각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소관기관으로부터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대상 법령에 대한 기초자료·세부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한다.

제12조의2(현안과제 부패영향평가) 위원회는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과 별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부패·비리 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거나 사회적 관심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구조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는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3. 국가시책으로 중점 추진되거나 예산지출이 증대되는 등 부패유발요인의 제거·보완이 시급히 요청되는 경우
4.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 당해 또는 관련 현행 법령등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기초자료·세부자료 접수 및 평가서 작성 등) 현행 법령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세부자료의 접수, 자료의 보완·평가서 작성 및 자문 의뢰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4조(자료 제출요구·실태조사 등) ① 평가담당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에 업무편람, 징계·감사·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에 관련된 자료·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자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감사·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에 관련된 자료·서류에 대한 문헌조사 등의 예비조사를 한 후 관련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태조사를 하거나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소관기관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 평가담당자는 법령운용의 실태에 대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 초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단체,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6조(개선권고안 보고 및 위원회 의결) ① 평가담당자는 개선권고안이 중요사항인 경우에는 소관기관과 협의하기 전에 위원장에게 중간보고를 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자는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마치면 그 결과 등을 반영한 개선권고안을 법무보좌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는다. 다만 제12조의2제4호에 대하여 제·개정 법령안과 함께 현행법령 등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7조(개선권고안 권고 및 재평가) ① 평가담당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선권고안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재평가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3절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18조(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제·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절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 제19조(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부터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개정되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현행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장 부패영향평가 자문

- 제20조(자문기구의 구성)** ① 위원회는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기관·단체 등이 추천하거나 위원회에서 공모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
1. 대학·연구기관·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부패방지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2.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기술사·세무사 또는 관세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부패방지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3. 그 밖에 학회 또는 협회에 소속된 자 등 제1호나 제2호의 자격요건에 상당하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21조(자문 의뢰)** ① 평가담당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기구에 속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제20조제2

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외부전문가 풀(POOL)에 등록된 외부전문가(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자문하려는 내용이 중요 사항인 경우에는 복수의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자문 방식) ① 평가담당자가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자문 요청서에 따른다.

② 평가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평가담당자는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자문 수당) 평가내용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통보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24조(운영세칙) 이 예규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문서·자료 및 역량 관리

제25조(문서 관리) ① 평가담당자는 평가 관련 문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접수년도 및 일련번호 등을 구분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평가 의뢰 문서가 접수된 때부터 평가가 완료된 때까지 생산되는 일련의 평가관련 문서 및 자료 등을 부패영향평가 종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26조(부패실태자료 수집·관리) 부패영향분석과장은 평가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공직자 종합자료통계 및 위원회 신고심사 실적 등 부패실태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27조(부패영향평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부패영향분석과장은 평가에

관련된 접수내용, 자문현황, 평가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수록·관리할 수 있도록 부패영향평가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의2(부패영향평가 역량 관리) ① 위원회는 평가담당자의 평가기법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부패영향평가 역량을 제고하고,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부패유발요인 발굴과 제거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3 부패영향평가 서식

(1) 별지 제1호 서식

※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자치법규명				
형 식	조 례	규 칙	교육규칙	
구 분	제 정	개 정	현 행	
관 련 법 규 명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지방자치단체	입안주무부서	부서명 (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		
입법일정 (예정)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대상기관(부서)		
		협의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		
의견수렴절차	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별도 불임자료	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			

작성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2) 별지 제2호 서식

세부 평가서

■ 평가항목

▶ 평가대상 조문

■ 평가기준

■ 현황

■ 문제점

■ 검토결과

(3) 별지 제3호 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평가담당	(소속)	(직 급)	(성명)
입안주무부서		통보(조치)일	200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		(예1) 평가담당부서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평가담당부서에서 입안주무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요구

